第245回國會(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4年2月17日(火) 午前10時

議事日程(第7次本會議)

1. 통일 · 외교 · 안보에관한질문

附議 2 案件

| 1. | 통일·외교· | 안보에관한질문 |] |
|----|--------|---------|----|
| 0 | 5분자유발언 | | 55 |

(10시25분 개의)

○議長 **朴寬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 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 질문을 하고 정회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崔明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〇崔明憲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의 대정부질문입니다. 16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회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 전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 당의 입장과 욕심만을 내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이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朴寬用 국회의장 이 일독을 권해 주신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 이 전 육군사관생도에게 보낸 영상편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진솔하게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정권, 우리 高建 총리나 저나 비슷하게 살아온 연대가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같은 그 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까지를 지내 왔다고 생 각이 됩니다.

모든 정권은 정권 말기에 가서 친인척 비리다 등 해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 주변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허위와 가식, 부도덕으로 점철된 측근과 친인척들에 의한 비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경선자금에 대해서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궁극적인 수혜자와 배경이 盧武鉉 대통령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盧 대통령은 '시민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핵심은 용인술입니다. 자신과 측근, 친인척에 대한 혁명 없이 무엇을 어떻게 혁명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지난 2월 12일 아침에 MBC 방송에서 진행자가 "우리 국민은 지도자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자조 섞인 멘트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의 진의나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총리가 견해를 더 이상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총리로서 盧武鉉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잘 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대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시기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國務總理 高建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제 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자 세로 국정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리에 연 연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崔明憲 議員 국무총리만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좀더 확실하게 국정을 이끌고 민생을 챙기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대통령 때문에 마음 졸이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國務總理 高建 정치가 표류하고 있을 때, 정 국이 긴장이 되어 있을 때라도 국정 운영에 차질 이 없도록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헌정 초유의 신 4당 체제가 생겼 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급변 속에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각 당과의 정책협의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서 구축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오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당면한 17대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서 공명선거로 관리하겠습니 다.

○崔明憲 議員 미국 정부의 핵심부에서는 "金正 日 정권의 속셈은 읽을 수 있는데 盧武鉉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미·대북 정책기조 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은 양 정 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한미관계를 군사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 걸 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종국에는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 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 겠다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대미정책의 기조입니다.

〇崔明憲 議員 요즈음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아주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 총리께서 '실미도'라는 영화를 관람하 셨는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아직 못 봤습니다.

〇崔明憲 議員 제가 전 주에 가 봤습니다.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가사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서로의 무엇을 다짐하는 장면에는 적기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이와 같은 영화가 미· 일본에 수출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고 수출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 살아온…… 저희 세대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옛 날에 불렀던 '전우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 고 충분히 적기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상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 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國務總理 高建 상영을 시켰다기보다는 상영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민주주

의, 사회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래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 제4 조가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이 두 가지가 우 리나라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를 폭넓게 보장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오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〇崔明憲 議員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 사회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었다고 저는 생각……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었기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봐서 그러한 것은 능히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겠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崔明憲 議員 어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특히 존경하는 崔明憲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崔明憲 議員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군의 용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늘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 25일부터 휴전되는 그날까지 최전방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네들의, 북괴군의 잔학한 행동을 그대로 목격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187공수여단이 평안남도 순안 지역에 낙하할 때 그 지역 민주인사들을 전부 생 매장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를 가서 발굴했는데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청천 강 백사장에서 우리 국군 포로들을 연행시키다가 그대로 소사시킨 그 광경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연 말이 없고,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용감했던 군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록된 것을 봤을 때 당시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총리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 다시 말해서 가장 실리적인 전략이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과 안정화 라고 한다면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〇國務總理 高建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崔明憲 議員 정부의 말만을 믿는다면 한미동 맹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현지의 체감 온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대책을 논의하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반미 정서가 덩달아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못 미더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교·안보 라인이 우왕좌왕해 온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안전 보장의 핵심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당시에 역사상 가장 불편해졌던 한미관계를 제일 먼저 복원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복원시켰고, 그 한미관계를 토대로 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으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기조이고, 변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젊은 층의 반미 정서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미국 내에 반한 혹은 혐한 정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큰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 민간외교도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전 보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미국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崔明憲 議員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 공동 사설에서 "모든 인민 군 장병들은 높은 대적 관념을 가지고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적 관념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는 처음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적 관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직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대북관과 주적 개념을 더욱 확고하게 갖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 국방부에서 금년도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주적 문제가 삭제 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이거 사실입 니까?

-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백서 발간을 아직 준비하고 있 지를 않습니다. 단 금년도에 국방백서를 발간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토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준비하고 있 지는 않습니다.
- ○崔明憲 議員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대 북관과 주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 명해 주세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저희 장병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적 개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체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주 안을 두고 대적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러한 교육은 거의 매주 정신교육의 날을 통해서 주 1회씩 지금 현재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 ○崔明憲 議員 저희들이 놀라는 것은 요즘 새로 입대하는 신세대 사병들에게 "주적이 뭐냐"고 물 어보니까 60%~70%가 "미국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한 결과 대부분이 군을 떠날 때에는 완전히 사상적 정리가 된상태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좀더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또 추가로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축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2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때 그 갭을 메꾸는 데 필요한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國防部長官 曺永吉 예산의 문제보다는 2개월 을 단축하게 되면 1년에 정집 소요가 2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崔明憲 議員 그런데 현재 자원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國防部長官 曹永吉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병역 자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미 작년 10월에 2개월을 단축해서 작년 10월에 입대한 병사가 전역을 하는 내년 10월이 될때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2개월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단축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이 현재의 병력 집약적인 구조로부터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형의 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崔明憲 議員 혹시 4월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인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가 그런……
-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금 2개월 단축하는 작업이 작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감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선거나 정치적인요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이해하고 있습니다.
- ○崔明憲 議員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 보니까 2 개월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조 정 도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 다. 그것은 장관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현지에 파견되는 군의 지휘관들이 KOICA 자금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의 대민 사업을 전개하겠다고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KOICA 자금의 현재총액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KOICA 자금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억 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래 3000만 불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내에서 6000만 불로 중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000만 불 중에서 4000만 불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파병을 하는 키르쿠크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요전에 제가 듣기에는 1500만 불 정도라고 들었는데 다시 증액된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병 또 의무대가 출발할 때, 공항을 빠져나갈 때 그 모습을 장관은 보셨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보았습니다.

〇崔明憲 議員 그때 자기 아버지를 환송 나온 어린애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했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이야?" 뒷구멍으로 나가면서…… 명예스러운 그 길을 가면서도 무엇 인가 죄인시당하는 모습으로 출국하는 광경을 보 았을 때 일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 오.

○國防部長官 曹永吉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임지로 떠나는 우리 장병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임지로 떠날 수 있도록 보낼 때는 모든 국민들이그들 전도를 축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明憲 議員** 알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통계 잡아 실향민 수는 약 870만, 그 가운데 60세를 초과한 분들이 120만, 그 중에 자기가족을 상봉하겠다고 해서 정부에 신청 낸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미미한 수치만 현재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향민들의 생각은 이러한 상봉은 금하고 오히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이라 도 보낼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절대다수 실향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원래 70년대 초부터 이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견 지해 왔던 것은 생사·주소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상봉은 그다음, 그다음에 재결합은 그다 음다음,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성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생사·주소 확인사업에 대해서 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 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행정력 면에서 우리만큼, 우리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고 소위 정보화되어 있지만…… 매우 원시적인 행정 체계하에서 생사·주소 확인 사업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매우 힘들다 하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저희로서는 이런 이벤트성 상봉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 결과, 6000평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단 금강산에 짓기로 합의를 했고, 그 삽질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질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금명 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면회소가 완성되면 거기는 단순한 상 봉 장소로만 쓰이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는 아무 래도 우편물 교환소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 서 자연스럽게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좀더 확장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하 겠습니다.

산하에 이북5도청이 있지요?

-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있습니다.
- ○崔明憲 議員 거기에 곁들여서 7개 도민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하고 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어떻게 남북문제, 특히나 통일 후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 준비세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이 그렇게 없는지, 이따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전혀 증액된 바가 없었습니다. 전번에 퇴임한 장관들은 전부 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만 하고 전부 떠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셔서 이따가 별도로 어떻게 금년도에는 조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크게 중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이북5 도청을 방문했을 때 도민회 차원에서 특히 탈북 자도 많고 남북 긴장관계도 완화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明憲 議員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

○孟亨奎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孟亨奎입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 점, 야당도 지리멸렬한 채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 또 제 자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해 온 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회복에 들떠 있는데 우리만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중국의기술력이 우리를 완전히 따라잡을 것이라는 연구결과에는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국가의 대오를 정비하고 무한경쟁에 맞부딪쳐 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만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盧武鉉 대통령은 총선에만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내각과 청와대는 출마열풍으로 뒤숭숭하고, 盧 대통령은 아직도 대선때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사모의 시민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외교·안보팀 분란 등 국민의 불안감과 해외투자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자주파와 동 맹파의 갈등으로 인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경질을 '한국의 숙청'이란 제목의 사설로 소개한 바가 있 습니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한미동맹이 지금 의 심받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거듭되는 맹세성 발언이 오히려 불안 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럼즈펠드 미국방부장관은 공공연히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국익과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盧 대통령께서는 의석 수가 아닌 국정에 전력투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존경받는 국가 원로 중의 한 분인 김수환 추기 경이 최근 "요즘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이들이 늘고 있고,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 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國務總理 高建 김수환 추기경께서 국가원로의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셔서 한 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孟亨奎** 議員 지금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 ○國務總理 高建 저는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북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친북의 정서 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남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도 휴전선에서는 양쪽의 군사력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 겠다고 생각합니다.
- ○孟亨奎 議員 김수환 추기경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한 칼럼니스트가 "김 추기경이 과대 포장되었다. 그의 발언은 민족의 내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國務總理 高建 김수환 추기경의 민주화 노력 이 과대 포장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 의하지 않습니다.
- ○孟亨奎 議員 그리고 "그런 발언이 민족의 내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國務總理 高建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孟亨奎 議員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광복 직후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남갈등, 이념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國務總理 高建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가지고 있 는 구조적인 이중적 성격, 거기에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 ○孟亨奎 議員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이른바 대 남 지령문이 입수되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 용을 보면 "이번에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성

장·강화시키고, 이번 총선에서 반미·반한나라 당 연합전선으로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자"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총리는 이런 지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國務總理 高建 없습니다.
- ○孟亨奎 議員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 니까?
- ○國務總理 高建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孟亨奎 議員 이러한 한민전의 지령은 북한이 우리나라 4·15총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하 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보는데 거 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國務總理 高建 우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보아서 그러한 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 ○孟亨奎 議員 盧武鉉 대통령의 대미 외교 기조를 보면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초기에는 냉소적인 대미 태도를 보이다가 방미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친미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말을 자주 바꾸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대미 자주파가 득세하더니 결국에는 장관이나 기존의 대미 외교라인을 대미 의존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통째로 문책하는 건국 이래 최초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盧 대통령의 외교 분야 스승이라고 불리우면서 인수위에서부터 손발을 맞추어 온 尹永寬 전 장 관이 갑자기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게 된 원인 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盧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미정책의 기조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국익 본위, 실용주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尹永寬 외교부장관의 사퇴는 외교부 직원 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감독적 책임을 지 고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수립 행정계통 내에 있어서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독 책임에 따른 사표

를 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孟亨奎 議員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尹 장관에 관해서 작년 11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외교부장관으로 가더니 완전히 미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대미 의존적인 사고를 가진 외교관들을 개혁하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외교부 논리에 파묻혔다"는 지적을 尹永寬 장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직기강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요?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尹永寬 장관의 사표 수리는 공직기강에 대한 감독 책임에 따라 사표를 수리한 것입니다.

○孟亨奎 議員 청와대 인사보좌관 정찬용 씨라고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孟亨奎 議員 이 양반이 장관 경질 사유를 밝히면서 외교부 일부 직원이 새로운 자주적 외교 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공직기 강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尹永寬 장관의 기본 정책과 노선이 잘못됐다는 대통령의 지적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인사보좌관의 표현이 적절했는 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마는, 좌우간 자 주외교라고 하는 뜻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관계 의 토대 위에서 자주, 균형적인 실리외교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寬用 의장, 趙富英 부의장과 사회교대)

○**孟亨奎 議員** 총리께서 그런 자세를 확고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尹永寬 장관은 원래는 말하자면 자주파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학계를 떠나서 외교노선에서 실제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에 근거한 실리외교,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게 아닌가요?

○國務總理 高建 바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한 기사 중에 대미 외교정책 방 향에 대해서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해 보니 까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결국 국익, 실용주의, 실리외교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孟亨奎 議員 이제라도 아셨다면 다행입니다.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미 외교라인의 교체는 신중해 야 했지만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리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무슨 나눈 말씀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尹永寬 장관이 감독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그 래서 제가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일 단 연락을 하고 같이 청와대에 가 상의를 했습니 다.

○孟亨奎 議員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단 중요한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계통의 중간 단계에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그 계통은 수리를 해야겠다, 보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孟亨奎 議員 이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NSC와 외교 부의 충돌'이라는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의 통 화내역을 조사했다는 것은 구시대적 권한남용이 자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도 그것을 사후에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NSC가 중요한 국가외교안보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발표하기전에 외부에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이것을 보안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보안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국정원에 냈고, 국정원은 관계 법에 근거를 두고 통화 사실자체만 조사를 해서 그 판단을 NSC에 통보해줬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孟亨奎 議員 이것은 국가 주요정책이 결정이 나고 안 나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외교부 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 면 감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감청은 아닙니다. 감청은 통화 의 내용을 듣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 사실만……

○孟亨奎 議員 예, 통화내역을 조사했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통화내역이라는 것은…… 통화를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동안 통화했느냐의 여부만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청은 또 별도의 경우입니다 마는……

○孟亨奎 議員 현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의 감청 이 10%가 늘었고 통화내역 조회는 무려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치지만 뒤로는 권 위주의로의 회귀라는 盧武鉉 정부의 이중성을 드 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 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탈권위주의가 되고 다원화되면 될수록 그러한 필요성도 또 증대되는 면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孟亨奎 議員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감청하고 도청할 필 요성이 더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國務總理 高建 감청이나 도청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두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다원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孟亨奎 議員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종의 언론 탄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삼 불(三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하는 세 가지 금 기인 삼불이 비공식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찰청 여성 경위가 대통령 사생활 관련 루머를 입에 올렸다가 문책을 당하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이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안 보는 데서 그런얘기 못 합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인사조치하고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부 적절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직을 바꿀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議員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에는 택시를 타고 얘기를 할래도 옆에 누가 있나, 다방에서 얘기를 할래도 무서워서 누가 있나, 말 잘못하면 붙들려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를 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 면과 관련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國務總理 高建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스 럽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孟亨奎 議員 민족자유외교를 주창해 온 盧武鉉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학계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대미 외교정책에 있어서만은 자주를 외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를 외치며 강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대미 외교정책부터 말씀 드리면, 대미 외교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토대 위에서 균형 적인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학문적인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뒷 받침을 해서 지금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창립 중 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孟亨奎 議員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 까?

○國務總理 高建 예,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孟亨奎** 議員 외교채널을 통해서 뜻을 전달한 것을 저는 보도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國務總理 高建 외교부장관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孟亨奎 議員 헌법 91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 장회의(NSC)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NSC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외교부 국 방부 위에 NSC가 있어서 이 나라 안보외교정책 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장관도 갈아 치우는 막강한 권부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 다. NSC는 국가 안보외교정책의 자문기구가 틀 림없지요?

-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 ○孟亨奎 議員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 ○國務總理 高建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SC가 장관을 경질하는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과 장된 보도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서처럼 NSC가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리나라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NSC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언제 NSC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자문했다는 보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시점에서는 NSC가 정말 실질적으로 기능을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새롭게 NSC를 정비하고 안보정책자문조정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다만 자문기구인데 어떻게 조정까지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이 NSC 의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NSC가 실질적으로 국가 중요한 안보정책 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 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따라서 초기에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소 좀 잡음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孟亨奎 議員 NSC가 본연의 임무인 자문을 하고, 일부 조정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 을 만드는 데 관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나 외교부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國務總理 高建 예, 알겠습니다.
- ○孟亨奎 議員 주한미군이 재배치가 되는데, 이 제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는 모두 다 한강 이남으로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國務總理 高建 용산기지 미군 말씀이십니까?
- ○孟亨奎 議員 예, 미 2사단 모두 포함해서요.
- ○國務總理 高建 미 2사단은 단계별로 일단은 1 단계로 의정부와 동두천 쪽으로 집중 재배치를 하고, 2단계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검토를 거 친 뒤 이전 시기와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가닥을 잡은 후에 그러한 안보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 결정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1990년도부터 우리 측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전 후적지는 1990년에 제가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구상했던 대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용산공원기획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孟亨奎 議員 총리께서는 작년 3월 6일 미군이 전 3원칙 중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유지 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사실 상 총리의 인계철선 유지 주장이 폐기된 것 아닌 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國務總理 高建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3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미군의 전쟁억지력의 향상 그리고 미군의 인계철선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미군의 인계철선에 대해서는, 소위 트립 와이어(trip wire)라고 하는 것은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 사실상 당사자인 미군들에게는 트립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좋지 않다해서 트립 와이어란 용어 대신에 프론트라인 프렌드십(frontline friendship)이라든지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의미로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이 발 발했을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한 미연합사 시스템에 의해서 미군이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孟亨奎 議員 한수 이남으로 멀리 평택까지 내려가더라도 유사시에는 자동 개입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산에 한미연합사 사무실도 그대로 존속하고 전시상황실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되 고 그렇습니다.
- ○孟亨奎 議員 정부가 당초 미국에 연합사와 유 엔사 잔류를 원했던 것도 주한 외국인 투자자들 의 안보 공백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유엔사 서울 잔류에 매달리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라면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을 했습니다. 한강 이북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 잔류가 낡은 생각이라면 총리는 한강 이북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새 생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연합사의 위치가 옮겨지고 안 옮겨지는 것이 직접적으로 낡은 생각이고 아니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군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 근본기조가 첨단무기체계 그리고 정보전력으로 군이 신속화,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되기 때문에 전략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옛날의 낡은 전략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전략개념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후방 구분조차가 사실은 없어지는 현대전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군사 업무 협조체제를 보강해 나가고 우리 안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孟亨奎 議員 우리가 국가적 자존을 지켜야 되고 결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미국에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최근에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열린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7차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합의서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의 가장 큰 입장차가 뭐고, 또 양국 간 입장차를 줄 이기 위한 방안은 뭡니까?

○國防部長官 曺永吉 7차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한 입장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양국의 법률적인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을 더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孟亨奎 議員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요?

○國防部長官 曺永吉 예.

○**孟亨奎 議員** 용산기지 이전도 우리 군사시설 이전과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볼 수 있 나요, 어떻습니까? 용산기지 이전도 국내 군사시설 이전과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國防部長官 **曺永吉** 질문하시는 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대이동이라는 것은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이전합니다.

○孟亨奎 議員 군사시설 이전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지요? 이 규정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기지 부지를 팔아서 마련해야 하지만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국립공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도 "시민의 휴식공간을 겸하면서 기념물로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주 한미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孟亨奎 議員 다시 高 총리께 나오시라고 그럴수는 없고…… 그러니까 용산기지를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국립공원화할 것인가의 방향은 지금 대충 정해진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曺永吉 예, 그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議員 그런데 현행 제도라면 용산기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 이전이 완료되어서 군사기지로서의 용도가 폐기되는 2007년 이후에야 매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선이전 후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용산기지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30억 달러 이상의막대한 선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를 국방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주한미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議員 총리 계실 때 총리께 질문을 할 걸 제가 잘못했군요.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실까요?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 발표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과거 차와 같은 형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군사당국자회담 관련 부분은 남북 양측의 표현이 각기 다릅니다. 알고 계시겠 지만, 남측은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측 은 "조속한 개최를 각기 자기 측 군사 당국에 건 의키로 했다"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지요. 같 은 한글인데 왜 표현이 다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남북 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우선 용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라고 그러는데 북쪽은 꼭 '북남'을 고집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 군사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방부장관이 총리의 통할 밑에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각 안에 있지만 북한은 권력구조상내각 밖에 국방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金正日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는 내부적인 권력구조의 특성 때문에 '건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겠다, 그 '건의'라는 표현을 쓴다할지라도 개최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議員 같은 뜻으로……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1차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孟亨奎 議員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16대 국회의원 모두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진하자는 말씀을 드리 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입니다.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 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현 盧武鉉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능을 질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지금의 민생불안과 국익훼손, 국론분열 등 안보위기까지 초래한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이 점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민생과 국익 그리고 안보 관련 현안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과 각종 이익단체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한 듯 그동안 쌓인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손을 놓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차라리 좋다는 심보로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기간은 국가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국내 정치적 논리가 국익과 관련된 대외정책결정에도 그리고 국가의 원초적 생존에 관한 안보 문제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국회에 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 다.

○國務總理 高建 감사합니다.

○홍문종 의원 국회에서 파병동의안과 FTA가 통과됐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했으 면 좋겠다, 그런 생각 총리께서도 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동감입니다.

○홍문종 의원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치되고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다 를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치하 고, 설명회를 갖고, 대화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총리께서도 유념하시겠 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 추가파 병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원내 4당 대표를 청 와대에 초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했고,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추가파병 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부대의 성격이나 부대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역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을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파병 문제나 FTA같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 꼭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거치시고 총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각료 차출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15대 선거도 그랬고 16대 선거도 그랬고 각료를 차출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차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국무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사례가 15대 총선 때 7명, 16대 총선 때 5명, 이번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5명의 국무위원이 출마 예정으로 사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문종 의원 여태까지의 관행이 잘 됐다고 생 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 헌법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헌정 운영 체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겸직 국무위원을 하시고, 또 선거기간이 되면 국무위원 직을 내놓고 다시 출마하시고, 저는 이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 령께서 각료들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하시고 또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마

는, 제가 아는 한은 국무위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께 상의는 드렸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강권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홍문종 의원** 총리께서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

○홍문종 의원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좌 우가······

○홍문종 의원 10년, 20년 내에도 갑자기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 일되는 것을 브란트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알 수 있는 정후가 상당한 기 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 니다.

○**홍문종 의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의 수 도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평화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 의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있으면서 또 통합적 인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수도가 필요하게 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 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때는 서울이 제일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홍문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수도는 평양과 서울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홍문종 의원**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써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겠 습니다만, 그러나 이전하기 전이라도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에 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적 중요성 이 매우 컸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오고 규 제를 받아 오고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지 역의 특성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은 국가를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법안 아 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개발 10개년계획에 5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도 낙후된지역에 속하게 되는 접경지역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접경지역지원법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경기 북부의 많은 도시들이 접경지역지원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총리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수도를 옮기고자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무슨 지 배세력의 교체니 천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 북부에 악영향을 미칠 때 국가안보에 전반 적으로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와 대통령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질문의 요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종 의원 수도를 옮김으로 해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남한 정부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약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투자하지 않겠다, 또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임에도불구하고 그 법을 운운하면서 경기 북부에 대한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의 굉장히 큰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행정수도의 이전 여부와 는 관계없이 앞으로 대북관계 개선 등에 따라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 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홍문종 의원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또 투자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리께서 이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경기 북부의 사패산 터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홍문종 의원 그런 문제랄까, 아니면 경기 북부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또 모든 시장, 군수들,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합해서 이제는 통일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될 경기 북부를 경기 북부 분도를 통해서 현 정부가 통일 정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통일을 위해서 경기 북부에 새로운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분도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홍문종 의원 예, 경기분도가 결국은 통일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 된 여론들은 자주 들었습니다.

○**홍문종 의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부가 요 청받은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총리께서 경기 북부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전부 참여해서 분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통일 미래를 위해서 경기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못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해당 지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게 되면 정부로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이라든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 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NSC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기자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한 일이 있다는 것 총

리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한 두어 건 더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일보 김모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구두로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 아십니 까?

○國務總理 高建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또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통화 상대자가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통화 상대자가 조사를 받았다? ○홍문종 의원 야당 의원의 통화 상대자가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작년 10월 대정 부질문을 했었던 한 야당 의원의 통화 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총리께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죄송합니다. 제가 금시초문입 니다.

○홍문종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부가 부당하게 기자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이 이동통신사의 통화내역에 관한 현장검증을 펼치고 있고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개인 신상정보 제공 불가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현장검증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國務總理 高建 불응하고 있는 그 사실은 지금 듣습니다.

○홍문종 의원 그렇다면, 이 정부가 아무 잘못 이 없다면 현장검증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국회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 NSC 사무차장이 구두로 정보통신에 관한 것, 통화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일보에 관해서도 구두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구두로 가능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구두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외교 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외교부 직원의 발언 파문으로 직원의 징계와 장관까지 교체되는 아픔이 있었습 니다. 이번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NSC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동맹파를 이겼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NSC 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조금 전에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SC가 확대 정비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 관계부처 간에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갈등'이라고 과도하게 보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그 과정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홍문종 의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신임 장관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NSC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 기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의한 결과가 어떻 게 됐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중대사를 통하고, 또 본부에서도 고위급에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구려사를 폄하한다든지 훼손하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를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2000년 이상 된 고대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관련 학계로부터 충분히 학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축적된 학술연구 바탕 위에서 검토해나가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

히 이해가 가는데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 느냐는 것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나외교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로부터 일단 학술단체를 통해서 연구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중국 정부에서 무슨 정치적인 의 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〇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당국자가 정치적인 의도는 일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통일 이후 대한민국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좀더 적극적이고 실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잘 알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우리 정부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홍문종 의원 외교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좀더 긴밀한 업무 협조나 조율이 있었으면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한일양국 간의 문제로 비화된 이후 우리 정부로서는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가와구치 외상이 당시 尹永寬 장관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도 우리 정부 입장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우표를 그대로 발행했습니다.

○홍문종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역사 도발과 일본 독도 망언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 주 는 대책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아니면 거의 속 수무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장관께서는 국 민들의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서 이 문제에 대 해서 전략적으로, 또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나치게 망언에 이르는 수준의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게는 '자주', '자주'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게는 좀 비굴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외교라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자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모든 국가 간에 긴밀히 협력해 가야 되는 관계이기때문에 우리가 어떤 균형된 바탕 위에서 실용적인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국익을 도모 하고, 또 상호 양국 간에 협력의 바탕을 좀 넓혀 나간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홍문종 의원 능력 있는 장관님께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생체실험에 관한 BBC 방송을 보셨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보도로 봤습니다.

○홍문종 의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권 개선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희 정부로서도 그간 상당히 고심을 해 왔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또 화해분위기를 계속 넓혀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과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EU 같은 데서도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이미 시작했고, 유엔이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잘 도모해 나가고 북한의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어떻 게 북한의 인권문제도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지혜를 짜 모아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그런데 지난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에 저희가 불참한 것이 맞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불참했습니다.

- ○홍문종 의원 왜 그랬습니까?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 불가분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입장을 일단 표명해 놓으면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우리의 입장이 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명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불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문종 의원 마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 서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알겠습니다.
- ○**홍문종 의원**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이전 문제하고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 다. 그렇지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예.
- ○홍문종 의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장관님께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한국군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한국군의 동의가 아니고 미 2사단의 2단계 배치는 당시의 한반도 정치・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양국의 정상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문종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렇습니다. 양국의 정상 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문종 의원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렇습니다.
- ○홍문종 의원 그런데 최근 대통령께서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 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문종 의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신적인 트립 와이어(인계철선)는 계속 지켜지되 실제적인 트립 와이어는 다르다, 실제적으로는 트립 와이어, 그러니까 "인계철선이 옮겨

질 수도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방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이 동맹관계에서 즉각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억제력이나 미군의 유사시의 자동 개입 문제는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로 다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항공모함으 로 한반도를, 말하자면 주한미군 대신에 항공모 함으로 재배치한다든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國防部長官 曺永吉 한국의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하고 역외에 주둔하는 것하고는 대 단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종 의원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이 환영받지 않는 곳은 주둔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렇습니다.
- ○홍문종 의원 그리고 2006년까지는 3분의 1선, 201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철수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國防部長官 曹永吉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 혁신이 병력 규모보다는 군사력의 질적인 효율성과그 능력에 우선 주안을 두고 지금 현재 군사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도 장기적으로볼 때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그런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미군의 전략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문종 의원** 국가의 외교와 안보는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 ○홍문종 의원 각료들께서는 정치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국가 외교·안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國防部長官 曺永吉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오전 중에 임종석 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오 후로 미루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마는, 오후 회의가 회의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副議長 趙富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행정자치부장관이 FTA 관련 시위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회의장님께서 경찰병원에 방문하는 데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임종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결정적 수단 이라 할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 부 정책을 점검해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러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개성공단 조감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만 보면 가슴이 뛰고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가 개성역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선죽 교입니다.

여기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고요, 저희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경의선과 도로 연결 사업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60km이고, 여기에서 평양까지는 160km입니다.

지금 이쪽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단지 해서 2000만 평의 개성공단사업을 앞으로 8년 동안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 빨간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100만 평을 조성하려는 계획이고, 이것은 1년 동안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 300만 평, 3단계 400만 평 해서 8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 공단 100만 평이 조성되면 약 100개에서 15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미 약 1500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련에서도 개성공단의 착공에서부터 착공 9 년차까지 우리 남쪽에서는 약 570억 불 정도의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북측도 약 155억 불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전경련이 추산한 바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고 또 가장 확실하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현재 지체되고 있고, 작년 6월 30일 첫 삽을 뜬 이래 전혀 진척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부터 정부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임종석 의원 저는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91년에 체결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동선언'이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 두 합의 후 우리 정부 정책에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습니다마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우리 정부는 이른바 핵 연계전략이라고 해서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후로 3년 동안 남북 간의 어떤 공식적인 대화와접촉도 중단되었습니다. 긴 동면에 들어가게 된것이지요.

94년에 이 핵 국면이 해결될 때도 우리는 제네 바협정에 참가는커녕 참관도 하지 못하고 경수로 비용 70%만을 일방적으로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후에는, 그때도 역시 서 해교전 등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당시 金 大中 정부는 남북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한반도 변화 관리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동의로 이끌어 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주동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5월 15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조치에 동의하고,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 가며 추진해나갈 것이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바로 이후에 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정 부의 이런 입장을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핵 연계선언의 일종이라고 해석해도 좋 겠습니까?

제가 앞서 두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 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된 방침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해 오고 있고, 이 결과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이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도 착실히 진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임종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연계하려는 전략이 아니고 정경분리를 통 한 동시병행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 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동시병행전략이되 북핵문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종석 의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동시병행전략이라는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남북 화해협력, 남북경협을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이롭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전략이 원칙입니다.

○임종석 의원 그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2003년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은 이 이후에도 남북교류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3대 경협사업이 큰 진전을, 더 빠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서는 기왕에 추진하던 3대 경협사업은 아무 지장 없이 촉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러한 데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맞춰서 곧 촉진이 되는 단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총리께는 제가 이것에 대한 분명 한 입장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제가 차이를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기계적으로 연계해서 할 경우에 사실은 아무런 실리적인 득도 없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경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협력,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동시병행전략의 관점을 총리께서 각 부처 간에 잘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임종석 의원**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역 규모와 경협의 확대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동안의 남북 교역액은 2000년 4억 불, 2002년 6억 4000만 불, 작년에 7억 2400만 불,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문제를 놓고 북쪽과 장

관급회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 으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차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기로 협력한다'이런 표현을 얻어 냈고, 지난번 11차 때는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끌어냈는데 그 뒤에 바로 6자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생긴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결국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로 발전되고 이것이 결국 핵문제라든지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지금 우리가 철도·도로도 연결하고 있고, 또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서 38선을 끊어 내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금강산을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 조치가 과연 우리가 정치·군사적인 문제만을 앞세웠을때 가능했겠는가, 쌍방에 이익이 되는 경협을 우리가 들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바로 그렇습니다. 솔직히지난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군사부문에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합의서를 마련했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상호 인사교류를 한다, 또는 정보를 교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개발 또는 금강산관광 등등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잘라내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부도 경협을 통해서 생기는 국가이익 또는 경협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북쪽에도 여러 가지위험요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작년 9월 17일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획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쌍방의 군대가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관광을 위해서 왕래하는 인원과 물자의 왕래를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가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세변화가 결국 이번 13차장관급회담에서 일차적으로 서해상의 서해충돌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기타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당국자회담, 장성급회담을 합의

하도록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북한이 2002년 7·1 경제 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는 종합시장을 허용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드물게 국가채 권을 발행하는 등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쟁과 인센티브 등 자본주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이미 경제개혁이라는 말이 북쪽 내에서도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경제개선조치 성과에 대해서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여러 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경제변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예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열거하는 것보다는 북한 상황에 대한 외국 언론의평가를 인용하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14일 워싱턴포스트는 'North Korea ships toward capitalism' 해서 노스코리아가 캐피털리즘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스코리아가 '조용히 시장을 열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썼습니다.

11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고성군 그러니까 금강산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노스코리아 가 문을 열고 있다'이렇게 표현했고, 12월 3일자 영국의 더 가디언 지는 '노스코리아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이런 제 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선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이 것은 분명히 그동안 우리가 6년 동안, 국민의 정부 5년 그리고 참여정부 1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화해협력의 마당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평가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종석 의원 좋습니다.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남과 북 공히 쌍방간에 각각 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고 있는 경협, 이 경협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개성공업지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실무적으로는 거의 풀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도 1월 29일자로 이루어졌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우리 법무부 특수법령 과장이 회담 대표로 참석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만 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임종석 의원** 그런데 정작 작년 6월 30일 착공 식을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 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이번 13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쪽은 특히 개성공단이 열린 지 4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도 났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네가 약속을 하고서 법을 만든 것은 2002년 11월 27일이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 법이라는 특별법을 비로소 발표하고 그로부터 약 속을 한 그 이후에 추진하기로 한 소위 하위규정 —우리 식으로 하면 시행령입니다마는—10개를 만 들기로 하고 지금까지 7개밖에 안 만들었다. 3개 를 빨리 마저 만들어라—그때는 물론 개성공업지 구 및 금강산 통행합의서가 1월 29일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체결된 이후입니다—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실랑이를 했느냐. 이것이 당신네 측이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먼저 반성하고 우리 쪽을 공격하라. 우리는 우리 대로 그동안에 토질조사와 측량을 해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 통행합의서가 체결되면 이 제 맘 놓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다"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3월에는 100만 평 단지에 대한 착공이 시작되고 금년 상반기 이후로 그 100만 평 내에 1만 평의 시범단지를 완공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먼저 진출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네댓 개를 진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저는 전향적으로 조금 더 빠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500 여 개 기업이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1500개는 2000만 평이 다 됐을 때······ ○임종석 의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해 둔 기업이 다른 쪽으로 이 동하지 않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 는 기업들도 많은 것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압박 때문에,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인건비가 57.5불인데 심양이 110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지금 월 57.5불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말썽이 좀 있었던 분양가 문제라든지 세제 관련해서, 노동력의 질이라고 할까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노동력의 질은 초기에는 능력 면에서 남쪽의 수준에 미달하겠지만 금방 진보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분양가는 지금 현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토지 임차료 문제가 있습니다. 평당 8만 원에 시작했는데 자꾸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이 평당 1만원까지만 되면 우리가 분양가를 평당 15만 원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뒤에 딱지가 'made in DPRK'로 되는 경우에 수출 문제가 나옵니다. 북·미 간의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내다 팔 수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 완성되어서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되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 한계 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핵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개발을 백 번 빨리 해 봐야 소용없고 핵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만들어도 팔 데 가 없다는 것을 북한한테 지난 12차 때도 얘기를 했고 13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알아듣게 설명을 했 습니다.

○**임종석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개성 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 아 니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100만 평 부지는 빨리 서둘러도 2006년 말에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좀속도를 내서 10만 평, 20만 평 쪼개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

니다.

○임종석 의원 외교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따 외교부장관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른바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막혀서 우리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경협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을 미국에 설득하는 일 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한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국인 미국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은 채로 결정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해를 시켰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에게도 귀책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개성공단이 늦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위규정을 빨리 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행합의서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하게속도가 둔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이번 2차6자회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크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3월에는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1월 29일 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 서가 체결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상당 히 획기적인데 이것이 좀 제대로 이행되는 데 있 어서는 역시 유엔사령부와의 문제도 있을 것 같 은데 그것은 어떤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아직까지 그쪽에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문제제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부러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테니 북측도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양쪽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와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는 말씀이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 의원** 개성공업지구 내의 행정권을 우리 쪽이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행정권이라기보다는 개성 공업지구의 관리이사장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사업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라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입니다. 다만두 기관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냐? 거기에는 대북협상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합당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초기 남북관계의 틀을 잡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북쪽에서는 빨리 우리 쪽 대표가 선임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 아산은 추천을 해 뒀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자기 그룹 내의 사람을 얘 기를 했습니다마는……

○임종석 의원 토지공사는요?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토지공사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3자가 협의를 하고 또 솔직히 북 측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삽질이 시작되고 나서도 본 격적으로 공단이 진출하기 직전까지만 기업이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서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에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관리이사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관리를 혹시 임명하려 하신다든지 또는 토지공사 쪽에서 누구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는데 통일부가 조절을 해야 될 텐데……

○統一部長官 丁世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 공단이사장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행정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북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인이나 또는 관리, 한쪽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천이 토지공사 쪽에서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또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임종석 의원 글쎄요, 관료가 가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좀더 직접 현장에서 북쪽하고 협상을 해 온 경제인 출신이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원만하게 북쪽하고 협상하면서 경협에 좀더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개성공단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북 협상도 중요하지만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지원 관련해서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좋습니다.

지난번 철도연결사업 때 저는 사실 굉장한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었는데 좀더 크게 해서 각국의 외교관들도 초청하고 뭔가 분단됐던 한반도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전 세계에 커다란 이벤트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는데 실무선에서 마쳤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남북경협과 평화구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뭐랄까요 경제문화엑스포 같은,혹은 산업박람회랄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민간이 앞장서고 통일부가 지원해 준다든지……

○統一部長官 丁世鉉 남북 간에 말입니까?

○**임종석 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장소를 북측 지역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측이 남북 간에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드러나는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석 의원** 그것은 해 봐야지요. 북측에 하고 설득이 된다면……

○統一部長官 丁世鉉 너무 수준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임종석 의원** 남쪽으로 초청해 오는 데 대해서 는 아주 적극적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희는 북쪽 사람들이 남 쪽에 많이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녀갔던 경제사절단의 일원들이 총리가 되고 또는 장관급으로 승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고, 9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바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의원 저도 그쪽에 새로운 혁신 경제마 인드를 가진 테크노크라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 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그것은 의미 있지요.

○임종석 의원 다음으로 작년 한 해 북한을 방문한 주민들이 1만 4208명입니다. 제가 자료로 본것입니다마는. 주당 275명이고 금강산 관광은 7만 400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현재는 육로로한 10시간 정도가 꼬박 걸립니다. 이것을 정기항로를 만들 수 없을까요? 서울-통천 간이나 또는서울-평양 간에도 그쪽에서 와서 간 것까지 합해서 남북 간에 56회나 비행기가 갔는데 이것은 주1회가 넘거든요. 북경과 평양 사이에도 화요일에가서 금요일에 나옵니다. 주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기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사업자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로서도 현대아산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그런 항로를 개설하려면 그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할까 전망이 있어야되는데 현재 그렇게 정기적인 여객기를 운항할만큼 수요가 있겠는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임종석 의원** 경제적인 이유 외에 다른 어려움 은 없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당국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제항공기구와도 협력을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항로가 열리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쁠 것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또 손해를 본다면 그 사업자의 타격이 너무 크지요. 지금 해로관광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도 아마 조심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마는……

○임종석 의원 경협이 본격화되고 수익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물론이지요. 저희로서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임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일부터 진행될 6자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정부는 이번 2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차 6자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더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간 한미일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북한도 지난 12월 9일에 외교부 성명을 통하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기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된다면 공동발표문이라든지 워킹 그룹 같은 것을 구성해서 회담도 좀더 정례화하 는 방안을 갖고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 니다.

○**임종석 의원** 중국의 왕이 부부장이 최근에 방한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왕이 부부장이 와서 저도 만나고 우리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하고도 오랜 시간 협의를 가졌습니다. 왕이 부부장이 그간 미국에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 북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 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두 번째 회담을 주 최하게 되고 이번에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 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중국으로서도 긍 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임종석 의원** 최소한 3차 회담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농축우라늄 핵 개발 문제를 미국 이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에 문제가 불 거진 이래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 는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서 같은 판단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시인으로 볼 때 좀더 확실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의 전체에 대해서 공개하고 폐기하라, 이런 내용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 검증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 한 구체적 증거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시해 온 것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당초 2002년 10월에 북한이 우라늄 개발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이 이러한 핵개발을 시인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거증 책임도 북한에 있다,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임종석 의원 포괄적 접근 그리고 일괄타결 후에 쌍방 간에 동시 단계적 이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핵문제에 북한은 '말대 행동의 원칙이다'이런 것을 제시했고,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또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것을 검증으로 이행할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경제협력 또 북한에대한 안전보장 제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2차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의원 '북이 먼저 한다면'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일괄타결하고 이행은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이 제네바협정의 정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고 우리도 너무 그렇게만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는 것 아

닌가,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석 의원 한승주 주미대사가 2월 11일에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확신을 그대로 옮기면서 미국이 얘기한 파기핵프로그램계획에 농축우라늄 핵 개발 방식까지 포함시켜서 완전 포기선언을 해야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보았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 에 보고드린 대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에 같은 판단을 공유하고 있 기 때문에 주미대사도 그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석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라크에 미국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량 살상 화학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크라이나의핵 2000여 기를 폐기했을 때의 경험처럼 우리가동시에 합의하고, 그때는 미국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다자간 문서 보장에 의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북에게 선행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농축우라늄 문제까지 같이 제기하고 나섰을 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그간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경우를 감안하셔서 동시에, 북에게도 의구심을 풀어 주기 위한 노력을 촉구 해야 하지만 또한 미국에게도 근거가 확실한 정 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 리 정부가 균형 있게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감사합니다.
- ○임종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亨根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출신 鄭亨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는 안중에 없고 경제 부총리 등 각료 14명을 총선에 차출하는 소위 '총선 올인 전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천주교 지도자이자 국가 원로인 김수환 추기경이 현재의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 진심 어린 고언을 하자 일부 언론은 김 추기경의 모습이 지난민주화 시절에 과대포장되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노사모 대표였던 명계남 씨는 '국민참여 0415'홈페이지 게시판에다 "나는 경선불복 바이러스의숙주 이인제 잡으러 논산으로 간다"는 등 차마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섞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386을 중심으로 구시대 구정치를 청산하고 개혁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밑천이 없 어지고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자 겨우 이른바 구 시대 각료를 정발해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핵보유를 언급하는데도,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반세기를 주둔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사령부가 인계철선의 역할을 종식하고이전하고, 주한미군의 대량감축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또한 북한보다 미국이 우리 안보에 더 위협적이라는 반미의식이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등 사태를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통일·외교·안보 부총리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흘러나오고 있습니다. NSC사무처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NSC 상임위원회를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처 역할을 하도록 설치되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목적의 기본정신인데 현재 NSC사무처는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외교부장관 해임 등으로 볼 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NSC사무처가 金大中 정권 시절보다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우 외 교·안보·통일 문제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보 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NSC사무처의 기능에 대해서 는 조금 과장되고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정부 때까지의 NSC는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도 정부에 몸 담아 있어 봤지만 NSC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NSC가 미국처럼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과 시스템 정착 초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NSC사무처가 무슨 월권을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국방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건이 주로 뭐냐 하면 그날 이슈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직접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안건을 만들 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설 명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NSC사무처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사무 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사전에 상임위원회 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총괄은 합니다. 그러나 자문하고 조정 하는 사무처의 기능 그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명확하게 좋아진 것은 관계부처들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또 NSC,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실이 모두 정보 를 공유하게 된 것, 정보공유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스템 초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정도로 월 권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총리가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지난 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 측과 국호 영문 표기의 수정─'Korea'의 K를 C로, 즉 'Corea'로의 변경─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호 영문 표기는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 용례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수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도 'Korea'라는 영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국호 영문 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

문이고, 더욱이 'Repubilc of Korea'라는 국호의 영문 표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정통성 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국민적 합의 절차와 국회 와의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합의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북한과 국호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북측은 이번에 민족의 존엄을 세우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하면서 국호 영문 표기 변경을 'Korea'의 K를 C로 바꾸어서 유엔에 공동으로 제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국호 변경이라는 것은 간단 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 그런 얘기를 제기한 다고 그러면 앞으로 장관급 회담 산하에 있는 사 회·문화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보자, 그렇 게 된 얘기입니다.

○鄭亨根 議員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은 여러 부류의 분단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4·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6·25전쟁 기간 중 납북된 인사들 그리고 휴전 후 납북된 480여 명의 전후 납북자 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만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북자 및 가족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는 법 그리고 납북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북측과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이산가족 교류사업에 이들을 포함시켜서 상봉이라든지 생사·주소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법률로써 납북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신중히 판 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다른 피 해 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 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항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발전해 온 한미동맹이 盧武鉉 정부 1년 만에 이미 진혼곡을 울리고 있다, 석양에 기울고 있다는 비판적이고 자조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盧武鉉 정부의 자주외교가 가져온 가장 큰실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차원에서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1996년 4월 미일 간에 채택된 신안보공동선언에 버금가는 소위 한미 신안보동맹선언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편한 관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에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즉 양국 정상 간에 채택된 공동선언이 바로 새로운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관계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서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하는 공동선언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신안보공동선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아마 '리서치 앤드 리서치'로 알고 있는데─지난 1월 5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가 보도되었는데, 내용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20대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 58%로 북한의 20%에비해 3배가량에 달했고, 30대는 미국이 47%, 북한이 22%로 2배 이상이고, 40대는 미국이 36%, 북한이 34%로 비슷했고, 50대만 북한 52%, 미국 18%로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의 조사는 '북한의 金 正日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에 누 가 더 우리나라 평화에 위협적인가'라는 물음에 金正日 위원장이 42%로 부시 대통령이라고 응답 한 38%보다 약간 높았지만 올해 들어 미국에 대 한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 같은 안 보관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지,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여론조사에서 '현재 동북아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서울대생은 미국 58%, 북한 20.7%인데 일본 도쿄대생은 북한이 59.7%고 미국은 16.3%입니다. 한일 양국 대학생의 안보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우리 교육이 위험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일응 보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 의 시기적 특성이나 설문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100%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위협', 하 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발발을 생각하 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북핵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놓고 그동안에 내외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온 것은 외교적인 방법이냐, 비외교적인 방법이냐,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냐 이러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근 1년 내내 우리 언론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전쟁의 위험은 오히려 북핵 문제를 비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에서부터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추측을 해 보고, 또 하나 역시 우리 사회의 젊은 층들, 특정 연령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정서가 있는 것은 사 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 임을 지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 적 특성,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휴전선에 수 많은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숙명적인 이중적인 구조의 특성을 잘 인식을 시키고, 우리 가-저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용미론이라는 얘기 를 했습니다마는-실용주의적으로 한미동맹 관계 를 기초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구축해 나 가야 한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鄭亨根 議員 최근 한중일 3국 간에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의 자국 역사편입 기도나 일본의 되풀이되는 독도 망언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무르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논쟁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고구려사 논쟁이 제기된 후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사회 과학원을 시켜서 말하자면 학문적인 연구부터 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역량을 강화 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 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민간재단으로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발족을 목표로 해서 전 고려대학교 김정배 총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고구려사연구재단의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과 또 이 재단에서 연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鄭亨根 議員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 ○鄭亨根 議員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에 북한은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지원병제를 폐지하고 전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남북 군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병역제도, 전민 개병제 채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대학에 가는 사람 딱 정해져 있고, 고등중학교를 17살 때졸업하게 되는데 바로 직장에 배치되는 사람 따

로 있고, 군대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층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병사를 뽑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격성이 강화 된다든가 하는 징후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 ○鄭亨根 議員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상류층 자제들이 대학 졸업하고 어름어름해 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 ○統一部長官 丁世鉉 대학으로 배정된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군대가 면제됩니다.
- ○鄭亨根 議員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합니다.
-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런 불만이 있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저희가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 ○鄭亨根 議員 참고로 북한에는 군 하사관, 사병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일단 보통 사병으로 17살에 군대에 배정되면 거기에서 10년 정도는 복무를 하고 직장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학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막바로 대학에 못 가는 청소년의 경우에 군대에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鄭亨根 議員** 대개 군에서 10년 정도 복무하지 요?
-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17살에 들어가서 27살에 나오면 그것은 일단 보통 사병으로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 ○鄭亨根 議員 최근 통일부는 인도지원국을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북한 인권환경팀을 해체하였는데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개선 의지의 부족을 말해 주는 개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한 인권환경팀을 해체했다기보다는 그 팀이─세 사람이 있었습니다─그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도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

성화시켜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인도 문제도 다루 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 인권환경팀은 그대로 사회문화기획과에 있 습니다. 그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NLL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NLL 문제를 협의하여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토관할권을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답변해 주시고, 또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 일단응해 나와서 대화 모양새는 갖추어 놓고도 군사적인 민족공조를 빌미로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기도하는 등 반미 책동에 군사회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북한은 이번 13차 장관급회담에서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협박하면서도 쌀과 비료의 지원을물밑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이번에 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장성급회담의 의제는 NLL 문제가 아닙니다. 서해상에서 꽃게철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물론 NLL 문제가 자연적으로 거기에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그 문제부터 협의해 보자, 그리고 기타 NLL 문제를 비켜 가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현재 대령급에서 동서 양쪽에서 매일매일 작동이 되고 있는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를 좀더 높은 급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또 낮은 급의 군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겠는지 등등을 협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이번 군 사당국자회담에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겠는지, 그것은 물론 조심은 하겠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켜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아까 쌀 문제하고……

○統一部長官 丁世鉉 쌀 문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중단하겠다고 일종의 엄

포를 놓은 것은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이 지금 중단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했지만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체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했고, 또 하나 쌀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보내 줘서 인민들과 정부가 모두 다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감사 표시를 먼저 하고, 금년에도 비료를, 봄철 비료는 좀 제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쌀과 비료를 도와줘서,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금년도에 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봄철에 비료부터 20만t 정도를 제때 보내 주면 고맙겠다, 작년에는 한두 달 늦어 가지고 사실상 고마우면서도 때를 놓쳤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6일 당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비료 20만t은, 사실 그것이 가면 세 배정도, 즉 60만t 정도의 증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해 줄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좀더 확실하게 본격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아까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했는데 북한의 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12월부터 북한은 공단지역 내 지상 장애물 철거비용으로 500억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토지임대료도 평당 39.5달러를 요구하는 등 각론 단계에서 무리한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지장물 철거비 또 토지임대료 등등 해서 처음에 300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난데없이 1200억으로 올라갔다가 500억으로 갔다가 최근에 150억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계산으로는, 토지공사나 현대아산의 계산으로는 토지임대료가 100만 평의경우에 평당 1만 원 해서 100억 원 정도면 15만원까지 분양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홍정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터무니없이 올렸다가 낮췄다가 또 올렸다가 하지만 점점 합리적인 선까지 접근 해 오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그런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 논리와 경협 속도 가속화를 무기로 우리를 압박했고, 그에 따라 회담도북한의 의도대로 종결되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글쎄요, 제가 수석대표였기 때문에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런 정도의 압박에 끌려갈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않는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측에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측에 더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또 북쪽에 끌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 북측에 끌려갔으면 어떻게 군사 당국자 회담을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북쪽으로서는 군사 당국자 회담은 비켜가고 싶은 테마입니다.

그리고 2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한다는 표현을 놓고 떠나기 30분 전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결실 있는 회담'이라는 표현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번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무슨 끌려갔던 회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공동보도문 초안에 자기네들이 내놓았던 구절은 하나도 못 들어갔다, 남쪽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푸념을 하고돌아갔습니다.

○鄭亨根 議員 좋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최근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현재 대북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북 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 게 보시는지……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마커스 놀란드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鄭亨根 議員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마커스 놀란드는 제가 그 전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만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97, 98년에 그때 비로소 북한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던 학자입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좋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현재 식량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어떤 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 오.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구를 놓고 볼 때 한 700g을 먹어야 된다고 계산하면, 평균 700g을 배급해 줘야 제대로 2300km 정도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면 639만t이 필요합니다. 작년 농사에서 북한은 425만t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4만t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형편에 700g을 다 줄수 없고 감량배급을 하기로 한다면, 약 78%로 22% 감량배급하면 54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115만t이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이 모자란 양은 비슷합니다. 감량배급을 전제로 했을때 110만t 내지 120만t 모자라는데 그 중에 남쪽에서 갔던 쌀이 40만t 있고, 그다음에 WFP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 준 옥수수가 10만t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50만t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반 정도는 남쪽이해결해 주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금년도에도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봐 가면서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봄 비료는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황장엽 씨는 지난 2월 8일 북한이 1996년부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바 있고, 부시미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칸 박사가 여러 가지 원심분리기 설계도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더 진보된 모델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켈리한테 북한 강석주는 개발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어떻습니까?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개발되었는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한의 핵 관련 정보는 사

실 한국이 독자적인 수집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있다 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鄭亨根 議員 장관님, 거기에 제가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원에도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다른 일 안 하고 대북관계를 중시하는데 우리 정보원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큰소리를 치냐 하면 대인정보 능력 같은 것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대인정보를 얻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맨날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소용돌이치고신문,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러니까 인적정보와 과학 정보가 결합되어서 결국 핵 관련, 기타 정치와 관련된 고급정보가 생산된다고 그럴까 확인되는 셈인데,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지요. 탈북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과학장비를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면서 1년 365일 또는 2, 3년 동안 그것을 확인해서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력 때문에도 그 과학장비를……

○鄭亨根 議員 그렇지 않지요. 핵무기가 문제된 것이 80년대부터 해서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공작을 하든지 모든 우리 정보 능력이나 국력을 총력 동 원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알아내야지 만날 우리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원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또 정부가 왜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나오는 사람, 탈북자를 통해서 인적정보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핵심지역 또는 중요한 비밀지역에 우리가침투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비교우위 면에서 미국이 앞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건 효율성 면에서 생산비가 너무 들면 사다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 습니까?

○鄭亨根 議員 장관님, 대개 우리의 틀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핵무기 개발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참 연구해 가지고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런 주장 은 근거가 없다고 만날 부인하고,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감하는 그런 보고가 우리 자세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 국력을 집중해서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데 매일 모른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 도로 하고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에 백세봉이라는 미 지의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간에 는 그가 제2경제위원회 당 책임 비서라는 설과 김정일의 아들 김정철이 가명으로 등장한 것이라 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역할은 뭔지, 또 金 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또 황장엽 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만약 金正日 체 제가 붕괴하면 아들 체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 장 유력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데, 눈과 심장의 질환으로 인해서 불란서에서 치 료를 받고 귀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 지, 또 후계자들의 여러 가지 권력파워 현상이 있다, 또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철, 누구 다 른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물려받으면 3대에 이르 러 대물림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과 관련 해서 저희들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백세봉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수 담당 비서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수 담당은 과거에 황장엽 선생이 북에 있을 때는 전병호가 담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연형묵이 하고 있지 않나,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하고 있고, 그다음에 金正日의 건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배가 꺼졌다 느니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이 나쁘다는 정조는 金正日이 움직이 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없고, 다만 한 30 ~40일씩 잠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가령 이라크 폭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디 안전지대에 가 가지고 밀도 있는 회 의를 주재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택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황장엽 선생이 하나의 전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성격적으로 나서기를 매우 싫어하는, 물론 지금 金正日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특별히 장성택이 꼭 권력을 움켜 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권력 구조라든지 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로서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성택이 건강이 나빠서 외국에서 치료하고 온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철이 지금 현재 부인인 고영희의 소생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철, 김정운, 아들 둘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정철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한 스물네 살 됐을 것입니다. 그 밑은 한 스물두 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김정남이는 서른세 살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부쩍 어머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고영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치 30년전에 金正日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옹립할 때 김정숙을 높이 우상화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아니냐 이렇게 일단 가설을 세워 놓고 좀 주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다만 3대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사회 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30년 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외교파, 동맹중시파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청와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장관께서는 우리 대미외교의 기조가 자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맹에 바탕한 굳건한 한미 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어떤 견해가 있으며 일부에서의 주장처럼 한미동맹이 숭미인지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한미관계는 국무총리님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굳건한 동맹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미관계든지 어떠한 이념관계를 자주냐 동맹이냐 이렇게 양분해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금년 4월 유엔 인권위는 다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정부는 작년처럼 투표 불참이라는 당당하지 못한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인권외교를 강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작년 인권위원회에서의 결의안 불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 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인권위원회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 또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관련 부처하고 긴밀 히 협의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鄭亨根 議員 이번 6자회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대북 핵 기술 유출을 시인한 것을 빌미로 북·파키스탄 핵커넥션을 쟁점화할 태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 늄 농축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을 시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측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그러한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핵 폐기는 플루토늄 핵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농축우라늄 관계 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鄭亨根 議員 농축우라늄이라든지 칸이 제공한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 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파키스탄 정부를 통해서 일차적인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도 아직까

지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칸 박사 자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에게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鄭亨根 議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源弘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흥분해 있습니다. 이런 흥분의 지향과 목표는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포퓰리즘, 이념갈등 등이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미·친북·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이나 80년대의 민주화운동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습자지에 물감이 스며들듯 그렇게 변해 갑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확산되어 갑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조금씩 소시지를 잘라먹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좌파세력의 살라미(salami) 전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15분 내에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까 남은 질문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정권 집권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은데, 이들 세력들은 적을 만들고 피아를 구분하면서 보수언론을 공격 합니다. 또 법과 원칙보다는 인치를 앞세우고 노 사모나 0415 같은 외곽 홍위병 조직을 만들고, 4·15 총선에 올인하면서 의식화를 강조하고 국 민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현실 진단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다양 한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 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 용할 수 있을 만큼 다원화되고 또 민주화되고, 진전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 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선진 사회로 가는 과도기 적인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 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더라도 이렇게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상호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통합적인에너지로 결집시키도록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고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늘 듣던 스탠더드 답변이신데요, 비서실장도 또 경제부총리도, 열우당에 들어온 이계안 씨까지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코드를 많이 맞추 셨습니까, 아직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코드를 안 좋아하니까 공개적으로 주파수만 맞추고 있습 니다.

○**朴源弘** 議員 주파수하고 코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코드라는 것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암호적인 성격이 좀 있고 폐쇄적인 성격이 이 있거든요. 주파수라는 것은 듣고 싶은 사람은 그 주파수에만 맞으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얘기가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〇朴源弘 議員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미·친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좌파, 친북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분단된 현실에서 이들의 발호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김수환 추기경께서 걱정하신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편향된 정서나 언행에 대해서 국가원로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런 정서가 바로 고착된 좌파, 친북세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고착된 좌파, 친북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 상황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이들의 언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수 있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源弘 議員** 총리께서는 남한에 북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다만 7,80년대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회에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장간첩도 북한은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다원화된 사회이고 개방화된 사회이기때문에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장간첩을 남파할 이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간첩이 있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朴源弘 議員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인데요, 실제로 산업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사상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남한 젊은이들의교화를 위한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텐데 간첩을 왜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안 잡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알기에는 몇 건의 간첩…

○朴源弘 議員 그러면 왜 발표를 안 하지요?

○國務總理 高建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마는, 좌우간 옛날식의 간첩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 에 그런 간첩 체포했다고 하는 보도는 없는 것으 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면 간첩 신고가 몇 번이던 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119번인가 그 표지판 은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한·칠레 FTA도 통과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침체된 한국경제가 좀 숨을 돌리기 바랍니다마는, 정책의 결정 후엔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이후에 거의 1년 이나 지났고 또 병력 수도 1만 명 얘기가 나오다 가 결국 36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소위 평화 헌법을 가진 일본 자위대보다도 파병이 늦었습니 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1년이나 뿌리쳤고 또 숫자도 40% 수준에서 막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했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대결적 미국관에 물든 일부 자주파의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가 국민을 굶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FT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는 네크워크형의 시대이고, 다시 말해서 동맹과 협조의 시대를 맞았는데,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혼자 이라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았 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한미관계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졸작을 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해 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파병 요청 후 거의 1년이 지나서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파병 요청이 있은 후 1차 파병은 벌써 있었습니다. 다만 9월 3일에 추가파병 요청 이후에 6개월 만에 추가 2차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병 규모는 3600명인데 이것은 미측의 당초 요청을 충분히 감안을 한,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 중에 있는 30여 개 나라 중에서 규모 면에서 미국, 영국 다음에 세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의 2차 추가파병에 대해서 미 측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파병을 통해서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〇朴源弘 議員 총리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관계를 묻겠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파병과정에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아주 비겁한모습을 보였고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는데요, 파병 불가부터 비전투병 파병 주장까지 고비 고비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다가 결국은 파병에, 추가파병이지요, 찬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인데요, 한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과 또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경박함만을 드러냈다고보입니다. 뜻을 꺾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교언영색,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덩달아 춤추었던 일부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병이 확정된 이상 남은 과제가 국론의 통합과 갈등 해소인데요, 국방부가 부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월남전 이후 처음으로 파병부 대에서 전투 중 부상이나 심지어는 사망, 전사라 는 비보가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총리께서도 생각하실 테 고, 또 정부도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총리께서는 파병부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2차 추가 파병이 결정된 이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의 방침은 지금 지적 해 주신 파병부대 안전대책입니다.

우선 정부는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종합적인 안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 방탄차 방탄복을 새로 만들어서 방어능력을 개선하고 있고, 또 파병하는 장병들에게는 이라크의 현지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병 전에 외교 특사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고, 또 현지키르쿠크를 중심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부족장 등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타 아랍권과 이라크 내의 여러 가지 우호적 여건 조성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병 후 그 부대들이 정말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라크 주민 들을 구호하고 해서 이라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말하자면 티모르에 갔던 상록수 부대와 같은 그러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 이 안전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朴源弘 議員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북정책이 햇볕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크게 이분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본래의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고, 햇볕론은 '대북 퍼 주기'로 변질됐고, 상호주의 원칙도 여러 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평화번영정책은 사실상 있으 나마나 합니다. 개념도, 원칙도 추상적일 뿐이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가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북한 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북 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 같습 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한반도 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의 개방과 변화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게 그 길인 것 같고, 그 전제 위에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방에 도움이 되고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이게 바로 자조의 정신이고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조의 정신, 새마을운동 방식을 우리의 새로운 대북접근정책 수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그동안 정부가 화해 교류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북한도 7·1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개혁·개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이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얼마 전 타임지에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源弘 議員** 아까 존경하는 鄭亨根 의원이 북핵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여쭤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리비아가 처한 여건과 북한이 처한 여건이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이제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

〇朴源弘 議員 이제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는 일체의행동을 중단하여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들을 끌어들여서 덕을 보려는 의도를 내비쳐서는 안될 겁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같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확고합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면 지난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쌀 10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 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〇國務總理 高建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朴源弘 議員 현재 공개된 것 외에 대북 비밀 접촉 지원 약속 등의 사실이 있는지, 또 추후에 이른바 통치행위로 변명해야 할 일을 벌이고 있 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제가 알기에는 제13차 남북 장 관급회담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립 니다. 다른 비밀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朴源弘 議員 지난 1월 5일, 새해 첫 근무일 아침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조선 복권합영회사 명의의 공개서한이 게재되어 있었 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 10월 7일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주패사이트(www.jupae.com)라는 북한의 도박 사이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항의성 질의였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한과 교류한 첫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지난 1월 30일 북한에 이메일을 보냈고, 또 2월 초하루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의원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 역시 남쪽 국회의원과 북측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한 최초의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의 네티즌들 수만 명이 북한 주패사이트(www.jupae.com) 비공개 게시판에 글 을 올렸고, 또 북측은 일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남북 교류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남북의 인터넷 협력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요, 인터넷 운영 방식도 사전 차단 방식에서 사 후 감시·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봐도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인터넷은 북한 민주화와 개방에 도움이 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대책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먼저 남북 인터넷 접촉에 대한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간 인터넷 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제도 등도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이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가능성 이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 간 인터넷 협력이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源弘 議員 홍콩 명보하고 일본의 도쿄신문 이 북한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회 생일을 맞아 가지고 국제 인터넷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바로 어저께입니다─일반 주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은 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朴源弘 議員**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총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 주요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자교육 강화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정말 사상 최악이 됐는데 우리 세대에서 한자의 맥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전광판 에 제 지역구도 '벼'라는 뜻을 가진 '서초(瑞草)' 를 한자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어문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침다행히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체 취직시험에 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한자의 필요성을 느낀 학부모들도 이제는 인식 전환으로 한자 사교육 시장이 아주 커져 가고 있 는데, 정말 한자를 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 파벳에 버금가거나 대신할 만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문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또 한자교육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정기국회에서 제가 한자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한자교육을 넣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혼용론 간의 논쟁이 첨예화될 우 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북아 경제권의 비중이 아주 커져 가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행 어 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의 한자교육을 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源弘 議員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뵙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 괄하고 있지요?

-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 ○**朴源弘 議員**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 니까, 행정부 내에서?
-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 ○**朴源弘 議員**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도 북한과 직거래하겠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거 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우선 첫째 민간인이 되었건 정부기관이 되었건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접촉승인부터 받아야 되 고,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의 사업승인이 나야 됩 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나 대북 전담 부서를 만들고 기금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도 해서 통일부가 사실 정부 내 다른 부처가 '북한'이라는 용어가들어간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실정 아닙니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한 정리와 조정이 없다면 이런 마찰과 갈등은 더 확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렇게 위험한 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朴源弘 議員 정리는 해야 되겠지요?
- ○統一部長官 丁世鉉 아니요, 현재는 총론을 쓰

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재경부에서 지역협력과를 만들어 가지고 대북 경제협력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지라도 어디까지나 시행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산자부라든가 건교부 같은 데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그것은 통일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총론단계니까, 연합단계로 간다면 각론까지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서 남북연합까지 실현이 된다면 각 부처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면 통일부 내의 각론은 지금 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정책을 다루는 곳이 통일부인데, 각종 인허가・승인・신고 사항이 많아 졌지요? 따라서 대북교류협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판단이라든지 심사라든지 협력 승인이라든지, 이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늘려 가지고 그것을 따로 떼어 낼 생각이 없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민관 합동조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朴源弘 議員 예.
- ○統一部長官 丁世鉉 기본적으로 북쪽은 지금 모든 것을 정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인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민간단 체, 민간조직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당과 정부라 는 점에서 일단 북쪽이 중국처럼 여러 가지 변화 나 개방, 개혁이 심화될 때까지 아직은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또 설사 그것을 만들어도 정부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다음은 주패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주패의 폐쇄는 당연하지만, 도박성이 크지 않은 복권과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복권이 도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패와 복권, 이 두 가지만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바둑까지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모자는 3개를 쓰고 있지만 몸은 1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한쪽을 막 는다고 해서, 한쪽은 놔두고 두쪽은 막는다고 해 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 고, 또 이렇게 차단하고 난 뒤 바로 프락시서버, IE서버를 작동해 가지고 바로 또 연결되고 있습 니다.

문제는 인터넷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있는 사업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 냐! 북쪽에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남쪽에서 도박성이 있는 사업을 승인할 것 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 니다.

○**朴源弘 議員** 주패 문제 5단계 해법이라는 소위 '박원홍 프로세스'라는 것은 보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알고 있습니다.

〇朴源弘 議員 도박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 대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4단계에 주패사이트를 다시 허용을 하는 식으로 로드맵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조금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통일부장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뵐까요.

외교 개혁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외교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하는 사람들이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데요.

늘 그저 팔러시 루틴(policy routine)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일상에만 급급한 실정인 것 같 고, 대결시대의 외교, 권위주의적 외교 행태를 아 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재외공관에서 잔돈푼이나 챙기는 고위 간부들의 불미스러운 짓을 폭로하는 내부고발까 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작년 2월에는 '신동아'에 기고한 바도 있는데, 어떻게 외교발전 중장기 플랜 구축을 하고, 외교 인프라 확충을 하고, 열린 외교부로 전환을 하는 3대 과제를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고, 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또 외교부에서 그간 여러 가지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외교부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어서 '신외교통상부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도 실시를 해서 외부에서 외교부를 본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 면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자체적으로는 업무 분야, 조직 분야, 인사 분야, 이 3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회계 비리라든지 영사문제, 또 복무문제, 감사문제,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그 태스크 포스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각오로 거듭 태어나는 외교통상부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추후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 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이 우리 국회의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동학혁 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과 일제강점 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은 지난 9일과 13일 바로 이 자리, 본회의에서 처리되었 습니다.

그런데도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 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은 본회의 에 상정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에 상정돼 처리되는 것이 국회법과 국회 운영의 관행에 맞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특히 보수단체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 법 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 관행의 위반이며 원내대표들의 월권입니다. 이 법안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도록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 당의 원내 지도부께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휴전 이전에 전라남도 함평과 경상북도 문경 등 전국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500만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를 포함한 제16대 국회의원전원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을 반세기가 넘도록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무슨 의미를 가지며, 그런 국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저런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과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질문·답변 과정을 보면서 저는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가혹한 일이거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서 하셨습 니다.

"이제까지 NSC가 형식적 기능에 그쳤으나 이 제부터는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 예를 들면 NSC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여러 정책의 자문과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여기에 두 가지의 개념에 혼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법에 없는 기능까지를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회의는, 즉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조정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 조정까지 하시고 싶으시다면 법 개정안을 내시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서 조정 기능까지 갖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國務總理 高建 예, 그래서 지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SC 자체는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아서 국가의 최고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조정의 임무를 대통령 외교안 보보좌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이 바로 NSC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NSC의 자문 기능과 실무적인 조 정 기능을 합쳐서 실질적인 NSC의 운영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로 옛날의 형식적인 NSC 운영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나 관계부 서 간에 아직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지 않기 때문 에 다소 오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낙연 의원 NSC가 실질화되도록 하기 위해 서라면 당연히 근거법의 개정부터 시도했어야 옳 지 않은가요?

○國務總理 高建 만약에 NSC가 아니고 외교안 보보좌관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의 외교안보정책 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말하자면 그러한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한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이런 시비가 듣기 싫어서라도 저 같으면 NSC법 개정안을 내겠는데요, 어떻게 고 집을 피우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지적해 주신 대로 법 개정이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의 혼동 은 이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NSC 사무차장의 월권 여부입니다. 그것을 총리께서는 NSC의 내실화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국 회의 내실화를 국회사무차장의 월권하고 혼동한 거와 똑같습니다.

NSC 사무차장은 어떤 위치냐 그러면, 이 법제8조 "회의(NSC)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기구의 제2인자입니다. 그 제2인자가회의의 사무 처리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NSC의 내실화 문제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내실화하고 국회사무차장의 월권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내실화하다 보니까 국회예산처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의원 그래서 사무차장이……

○國務總理 高建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 무차장의 월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월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드립 니다.

○**이낙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제가 두 가지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파병안입니다. 4장짜리 문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군대를 해외에 파견했던 1964년 제1차 월남파병 때의 파병동의 안입니다. 14페이지짜리로 전부 손으로 써진 것입니다.

페이지 수나 분량에서도 이번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그 내용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 파병동의안에서는 파병 배경, 부대의 성격, 부대의 임무 등 파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 어 소요예산도 없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1964년도의 1차 월남 파병동의 안 때는 파병을 위한 한 월 간 합의사항, 한미 간 합의사항, 지원 내용, 소요예산까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독면, 권총, 의 자, 책상, 영사기, 물탱크, 천막, 세탁기, 건조기 등 20개 품목은 미군으로부터 수령한다", "9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요예산은 1485만 7900 만 원이다", 심지어 "이등병의 일당은 60센트이 고 대령 일당은 7달러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 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파병동의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군 전력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특전사와 해병대를 주축으 로 하는 전투부대를 보내면서도 '평화·재건' 임 무라는 말로 부대의 성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며 대미 협의와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구체화될 예정"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백지위임을 해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였던 1964년보다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자랑하는 2004년에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무성의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필요한 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군사적 차원에서 현지 여건과 임무, 말하자면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할 것이냐 하는 지역 결정, 그리고 그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미 측과 주둔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그래야만 구체적인 예산소요도 나오고 하는 상황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었기때문에 파병동의안 서류는 그렇게 간단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국방부가 국방위 등을 통해서 파병안의 세부내용과 예산소요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이번 파병동의안에 보면 소요예산에 관해서 조금은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요골자 '바'항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바로 그 아래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소요예산은 대미협의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마치 미국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미 측과 키르쿠크 지역에 있는 미 측의 주둔시설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 후에 명확한 예산소요가 나오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다음에 파견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동 기간 이전에라도 철수 가능"이라고 파병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현지 정세의 호전으로 파병부대의 임무가 조기에 달성되었다든지 또 파병부대의 철수나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있었다든지 하는 현지정세, 국내외 정세,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 결과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장병들에게 사상자가 발생했다 할지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부로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하는 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이번에 유엔조사단은 이라크에 내전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6월 30일부로 이라크 측에 주권을 이양하고 치안도 이라크 측에 넘길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전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엔조사단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우리 부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종 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금 현재 그러한 상황을 가상해서 예단적인 추단 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가상해서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가상해서 준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4월 1일부터 파견인데 6월 30일

에 치안 이양이다, 그래서 내전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두 달 사이에 벌어질 일입 니다.

○國務總理 高建 내전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안이 전적으로 이양될 것이냐? 물론 현재 과도정부와의 얘기는 6, 7월경에 과도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전적인 치안을 이라크에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외교협회에 가셔서 연설하셨나요?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했습니다.

O이낙연 의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요새 밤잠이 잘 안 온다.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외교부 개혁하고 지금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밤잠이잘 안 온다"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그런 취지로 얘기 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낙연 의원** '괴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장관이 갑자기 경질되 게 된 배경이나 상황이 제가 북핵문제라든지 한 미동맹 강화라든지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쓸 시간을 또다시 외교부의 조직이나 인사문제 또 혁신 이런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다, 이래 잠을 이루기 어렵다 하는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한 일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금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오늘로 33일째 공석입니다. 장관께서 바로 지난달까지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두어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글쎄요, 제가 전에 외교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통령님의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아니, 그 일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으나마나 똑같은 자리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공석이 되었는지, 누구를 임명을 안하는지, 이것은 대통령님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제 차원을 넘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潘基文 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 취임 직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주외교 가 무엇이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추 구하는 균형적 실용주의 외교다"이렇게 답변하 셨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그렇습니다.
- ○이낙연 의원 혹시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자주 외교'의 뜻을 潘 장관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계십 니까?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는 盧 대통령님께서 그런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외교를 펼쳐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이낙연 의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균형외교'랄지 '실용외교'라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그것을 '자주외교'라고 해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사실상 '자주외교'라는 말을 정부에서 거의 쓰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 당국자가 자주외교라는 얘기는 안 했고,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은 썼는데 이 자주국방도 어떤 배타적인 의미의 자주국방이 아니고 우방과 협력해 가는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우리 국어대사전을 보면 '자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10년 내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자주'는 국어사전에 나온 자주하고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균형과 실용'이라고 潘 장관께서 풀이하시면 혹시 潘 장관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제가 지금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복절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주국방'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를 볼 때에 우리가 상당히 수혜자적인 입장에 있었고, 우리가 너무 미국의 방위력이라든가 이런 데 좀 기대하는 심리적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1세기의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협력적인 자주국방'의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趙富英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 ○이낙연 의원 '자주외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1월 25일비슷한 얘기를 한 것 아시지요?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낙연 의원** 아무도 안 쓰는데 언론들이 창작해 낸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좋지요. '자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주를 입으로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 게 하지 않더라도 자주적인 결과를 낳는 것, 자 주적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그렇습니다.
- **○이낙연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승주 주미대사는 1994년 제1 차 북핵 위기 때 외무장관을 하셨습니다. 그 당 시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애 쓰신 분입니다.

그 韓 대사께서 어제 아침 자 조선일보 인터뷰 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4년에는", 즉 1차 북핵 위기 때는 "우리가 미·북 간 양자회담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영향력이 커서 사실상 3자회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어도 영향력은 그때만 못하다. 또한 과거에는 외교 담당자들이 결정하면 정치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격렬한 국내적 절차를 겪게 돼 있다."

어째서 우리의 영향력이 10년 전보다 더 떨어 졌습니까?

〇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도 그 기사를 봤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간접 적으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승주 주미대사로부 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인터뷰하는 과 정에서 약간의 오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잘못 표현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승주 대사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94년에는 미·북 간에 접촉을 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는 못 했고 약 10여 년이 지난 그 이후 의 현 상황은 6자회담으로 발전되었는데 그만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 잡다기해졌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관련국 간 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등 전체적인 다이내믹스가 달라졌다, 이런 측면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코 한국의 역할이라든가 위치가 약해졌다, 저는 이 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작년 3월에 참여정부 초기에 북한 핵문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을 때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3단계 로드맵을 미국 측에 제시해서 같이 한미일 공조를 끌고 간 것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작년 7, 8월에도 한미일 공조를 우리가 끌고 나갔고, 특히 금년 1월에도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논쟁을 겪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10년 전과 지금을 비해 볼 때 국민들의 국제 정세를 보는 인식이나 사회단체, 언론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나 건전한 의견 이런 것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부가 요즘 어떤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관련 단체나 언론 또 국회 이런 퍼블릭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풀어 나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 다.

○이낙연 의원 주미대사나 언론들이 '복잡해졌다'는 말을 '영향력이 떨어졌다'이렇게 표현할까요?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렇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이낙연 의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대기 시민단체 위원장이 엊그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단 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DJ 정부가 펼친 햇볕정책의 성과와 달리 현정부는 외교력과 통일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한 것이별로 없다. 남북 모두 경제협력을 대승적 차원이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더 많이 변화할 수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첫째, '외교력이 없다'—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10월에 우라늄 핵문제가 불거졌고 그 핵문제를 안고 참여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이 핵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하는 데 대한 한미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외교적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1차 3자회담으로 끝나고 말 뻔했던 핵문제해결방법을 1차 6자회담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2차 6자회담으로 모멘텀(momentum)을 이어가는 것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에는 중국이 자꾸 돋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뒤에는 한국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중국 정부는 어떤 점에서는 탤런트라고 봐야 되고 PD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학이 없다'—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盧武鉉 대통령이 작년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추진방식은 좀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승 발전하기 때문에 철학은 같습니다. 새로운 철학을 내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요.

그런 점에서 '철학이 없다'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경협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없다'이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002년 남북경협 소위 교역액은 6억 4000만 불이었습니다마는, 작년 남북경협이 7억 2400만 불

로 껑충 뛰어서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런 등등……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진도가 안나간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경비를 왜 정부가보장해 주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불만은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성공단도 지난번 장관급회담 때 북쪽이 불평을 하길래 제가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북측이 준비가 덜 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약속한 법이나 빨리 만들어라, 그다음에 토지임차료 같은 것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올렸다가 또 몇백억 원으로 깎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합당한 요구를 해라,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부사항을 잘 모르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O이낙연 의원 모르기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간부가 몰랐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남북 간에 오고가는 얘기를 시민운동단체에서 전부 알 수는 없지요. 정부로서는 정보를 열린통일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안 오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바로 이런 문제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불만을 갖는 것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접근하신다면 그런 불만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저는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장관께 이런 말씀 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열매를 따 먹고 있을 뿐이지 참여정부 나름의나무는 못 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혹시 나무 심은 적이 있습니까?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전개되고 있는 평화번영 정책은 철학과 정책의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그리고 참여정부 1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관성을 가지고 했던 결과로 이제 소출 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 니다.

○**이낙연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지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관계의 진전 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점을 모르기 때문일 거다라고만 치부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제 이벤트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갈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뉴스화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유념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저희가 고민을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雄奎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과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 분!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盧武鉉 참여정부가 21세기형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은 총체적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노와 체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태백, 38선 등의 자조 섞인 표현들이 말하듯 盧武鉉 대통령을 열화와 같이 지지했던 20, 30대 젊은이들조차 盧武鉉 정권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 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정책과 동맹정책은 엉망이 되어 버렸으며, 대북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盧武鉉 정부는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여전히 金正日 정권의 젖줄 노릇을 계속하고 있으며, 盧武鉉 정부의 반미 친 북적 행태에 힘입어 개혁의 미명 아래 친북좌익 반미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주 외교를 내세운 외교정책은 金正日 민족공조와 결 합하여 한미동맹을 파탄 위기로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권의 이러한 이념적 불투명성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듦으로써 대한 민국의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 보다 미국을 꼽고 있으며, 59.8%가 미국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국민의 66%는 안보가 10년 전보다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우 왕좌왕하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국민들을 불안과 체념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토록 국정 전반이 악화될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지난해 참여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국정환경조건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불편해진 한미관계라든지 북핵문제라든지 이라크전쟁이라든지 경제침체, 오래 묵은 집단갈등,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시켰고, 이 토대 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 이로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왔습니다. 또 사스 문제—WHO에서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 국가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금 인풀루엔자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많았지만 근로 손실 일수는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18%가 줄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못 하던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를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제도를 도입했습 니다. 또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체결하 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묵은 사회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분출 했습니다. 출범 초에는 시스템적으로 대처하지 못 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5월 22일부터는 국 무총리인 제가 직접 주재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일관된 원 칙으로 대처해서 24개였던 갈등과제 중에 20여 개가 거의 해소되었거나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네다섯 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 가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용확장, 신용버블의 문제가 지금 신용불량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활력이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아야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각은 현시점에서는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기본임 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雄奎 議員**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 ○國務總理 高建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심포 지엄이 열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曹雄奎 議員 그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인식 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리차드 알렌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기를 "한미관계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는 북핵 위기와함께 또 하나의 위기다. 앞으로 몇 달간 한미관계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 소장인 알렉산드르 만수로프는 "한미관계에 석양이 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리차드 알렌은 또 얘기하기를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평가가 달라지면서 50년 동맹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긴장을 겪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시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미를 이간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억지 역할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고 재배치해 덜 위험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예를 들어 주신 리차드 알렌이 관여했던 또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헤리티지재단의 퓰너이사장이 3주일 전에 제 방에 들렀습니다.

내한하면 제 방에 반드시 들러 갑니다. 허물 없이 얘기를 합니다. 한미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미 군 재배치 문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서 정상적으로 잘,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고 하는 평가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을 해주는 분들의 얘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염두에는 두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얘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曺雄奎 議員** 총리께서 너무 안이하게 한미관 계를 인식하고 있고, 제가 미국을 좀 자주 다니 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을 말하면 항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미관계 잘 되고 있다."

퓰너 이사장은 제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하고 많은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분도 한국통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를 많이 행사합니다. 그러나우리가 저녁식사 시간에 술 한 잔 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요동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國務總理 高建 그런 말씀들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曺雄奎 議員** 항시 미국 정부의 교과서적인 얘 기를 듣고 안심하다 뒤통수 맞는 것이 우리 외교 고 우리 국가의 처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있는 국방과 안보 그리고 외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역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줄거 리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자회담까지 이 끌어 내서 지금 6자회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낙관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 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다, 이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 구조조정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용산기지 이전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도 원활하게 양 당사국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큰 기둥으로 해서 경제·통상·외교도 넓혀야 하겠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110억 불을 투자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것과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자체 방위역량을 내실 있게 늘려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曺雄奎** 議員 총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답답하고 불안한데, 우리 국민의 국방과 안보관이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의 반미・ 친북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金大中 대통령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 라고 했을 때 7000만 민족을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은 평화 수 호자이고 미국은 전쟁광으로 인식하도록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또 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3월 2일 북한 전투기가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정찰기의 15m까지접근했을 때 강제 착륙을 협박하면서, 이 사건을 두고 대북 경고 대신 미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도리어 미국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은 호전 행위자로,북한은 평화 수호자로 인식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丁世鉉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 그램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를 두고 "이것은 북한 의 체제 방어 및 협상 카드용"이라고 하면서, 북 한을 두둔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 도고 친북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미국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국방·안보에 대한 자세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정부의모든 대미정책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실증을느끼고 한반도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의 $60\sim7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이것이 제대로 국방과 안보를 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역시 한미동맹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토 대로 해서 자체 방위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주한 미군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曹雄奎 議員 됐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중동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전쟁이 예고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대중동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동 정책의 필요성은, 첫째 우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석유를 매개로 중동 지역과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의 치열한 자원전쟁의 격전지인 중동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한참 동안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역시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77%에 달하는 석유를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란으로부터의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이라크나 알제리 등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대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중동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등 3개국을 방문하고, 기타 관련 경제장관과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를 전중동지역에 파견해서 중동외교를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曹雄奎 議員 중동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민주주의와한미동맹 그리고 석유라는 세 축의 바탕에서 그외에 한일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기반으로 북핵문제 등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6자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첫째 북한이 제2차 6자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 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결 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합의해 줄 경우—어떤 핵동결이라든가 폐기—과연 이런 북한의 합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북한이 이것을 또 위배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장관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북한이 합의를 해 놓고 다시 약속을 깰 가능성이나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가장중요시하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북한이 위 약할 수 없는, 합의를 깰 수 없는 방향으로 하자 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북한이 첫 단계를 지키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우리도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를 이행하지 않는, 단계별 합의를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曹雄奎 議員 어쨌든 북한이 2002년 10월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갈로 사용했다가 그다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함정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아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우선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 는 HEU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기술과 디자인을 유출했다고 시인했기 때 문에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曹雄奎 議員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또 국 제사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 문제로서 북한 자체의 '내 부적 모순'에서 배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 연 이런 북한의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만약 또 이런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에 어 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가 우 리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협 을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내용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 이 이러한 핵 폐기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우리 로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북한 내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상 황 변화, 여기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할과 한국의 존재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제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정부로서는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반도의 평

화체제를 유지해 나가지만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정부 내에서도 그에 대비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曹雄奎 議員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들어 보면 그렇게 낙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 가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알겠습니다.
- ○**曺雄奎** 議員 통일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金正日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햇볕정책을 악용했 다고 생각하고, 또 盧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내건 햇볕정책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1970년대 金大中의 4대국 보장론과 6·15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서 한반도에서 유엔체제와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구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한미공조 대신 민족공조라는 명분으 로 사실상 金正日 체제와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 고, 둘째 베를린 선언으로 金正日 체제를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이며, 셋째 자주ㆍ평 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합의해 줌으로 써 金目成의 통일원칙을 수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넷째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한반 도 평화선언을 통해 휴전협정 체제를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박탈하여 유엔체제의 전 면적 수정을 시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 섯째 한미동맹의 미군을 평화군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고, 여섯째 남북한 합작을 도모하 는 6·15선언을 만들었고, 일곱째 이를 위해 국 내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여덟째 결국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를 바탕으로 한 건국이념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음모적인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첫째, 대한민국 국민 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려 는 음모가 있었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4대국 보장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4대국 보장론이 발표된 1971년 장충단 연설 때 저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4대국 보 장론은 사실 4대국 교차승인론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부터 하자는 그 런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방제 통일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물론 연방이라는 용어를, 金大中 대통령이 재야 시절에 통일 방법과 관련해서 '공화국연방'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연방'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단어가 같다고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치 평화번영정책 또는 햇볕정책이한미동맹 관계를 해체시키기 위한 어떤 구상인 것같은 그런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그러려면 뭐 하러 金大中 대통령께서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점은 盧武鉉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면 왜 주한미군의존재를 통일 이후까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너무 비관적인 또는 편향된 시각으로 햇볕정책과또는 평화번영정책을 해석하고 곡해했다고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曺雄奎 議員** 지금 盧武鉉 대통령께서 주한미 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그것은 총선용이라고 얘기하 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일찍,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총선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曺雄奎 議員**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취임 후부 터 지금까지 총선에만 매달렸지 국정은 참말 돌 볼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글쎄, 어떻게 보시든 그것 은 자유입니다만……

○**曺雄奎** 議員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BBC 방송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다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내보냈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첫째, 2월 10일자 LA 타임스에 한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탈북자인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치범들을 대상으 로 생체실험이 자행된다는 얘기는 많이 돌아다니 지만 어느 것 하나 입증된 것은 없다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바로 그 정치범 수용소 출신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이 문서의 진위 문제와 관련해서 박스기사가 하 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 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국 가안전보위부'를 '국가보위부'라고 한 것도 조금 은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 그다음에 만약 그것 이 절대 기밀이라면 내용에 무슨 생체실험이라든 가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했으면 가령 '몇 호 사업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 현을 했겠지요. 그 점에서 앞으로 검증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대목들이 많이 있는 문서였다고 생각합니다.

○曹雄奎 議員 여기 6·15정상회담의 남북공동 선언 제3항에 보면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 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우리 국군포로 문제, 8만 명에 달하는 전쟁 중 납북자 문제, 납북어부 문제, 탈북자 문제 또 북한의 인권 실태, 어느 하 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6·15선언을 핑계 삼아서 별의별 것을다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〇統一部長官 丁世鉉 거기에서 말하는 인도적문제는 일단 좁은 의미의 인도적 문제 내지는 통상적인 70년대부터 남북 간에 논의되어 왔던 맥락에서의 인도적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특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당시는 정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나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장관급 회담 때마다 기조 발언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묵묵 부답, 때로는 준비가 덜 되었다 하는 식으로 비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북한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군포로 문제는, 지금 朴槿惠 의원 님이 저쪽에 계십니다마는, 2002년 5월에 방북하 셨을 때 金正日 위원장과 직접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해 9월 에 있었던 제3차 남북적십자총재회담에서 문서화 했습니다. "국군포로"에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장관급 회담에서는 "당신네가 밑에서 金正日위원장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이다. 이것은 金正日위원장이 우리 남쪽 국회의원한테 약속한 것인데,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인데 이 약속을 빨리지켜라"하는 식으로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역시 이것도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슬금슬금 끼워 넣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건이 만났습니다.

〇曹雄奎 議員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화해·교류협력이나 동 질성 회복 등 여러 정책사업을 북한의 인권문제 와 연계시켜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 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남북 간에 어젠더는 굉장 히 많습니다. 일단 핵문제가 금년, 작년 한 해 동 안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먼저라 고 생각합니다. 曺雄奎 의원님께서는 대학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 가의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시큐러티(security) 문 제입니다. 두 번째가 번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인권문제는 국가 체모에 관한 어소리티(authority) 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남북 간의 평화문제를 얘기해서 자리를 잡 아 놓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체모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순서가 제기하기에는 조금 그 보다 시급한 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으로 하여금 매년 국·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안에, 우리 사회문화교류국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鄭亨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인권환경팀을 해체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팀은 해체했지만 인권담당관을 지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서 통일연구원에주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유엔 인권위원회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

는 법률적 또는 학문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曺雄奎 議員**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화만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물론 대화·압박 병행론 또는 배드 캅, 굿 캅 논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5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고비로 해서 한미간에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에 합의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6자회담이 1, 2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우리가 다시 압박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2차 6자회담의 결과를 보고 한미 간에 다시 조율해도 늦지 않다고생각합니다.

○曹雄奎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존경받는 원로도 권위도 없어졌습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그 틈을 노려북한 金正日 정권이 꿈꾸는 한반도의 적화가 실현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찬란한 21세기가 아니라 칠흑 같은 암흑만이 펼쳐질 것이며, 비극과고난의 역사가 끝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이익만을 챙기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여 한 걸음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력할 때만이터질 듯이 끓어오르는 수많은 갈등을 잠재우고화합과 상생의 사회로 바꾸어 난국을 극복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영달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70만 대한민국 국군

의 강고한 국방력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 계속 되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계속, 한미 간의 견고 한 동맹관계 발전·유지,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2차 6자회담과 이라크 파병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통 일·외교·안보상의 중대한 현안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자존, 번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긴장과 종속,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2월 25일로 예정된 제2차 북핵 6자회담은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가 조성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가 실현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 한 회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1차 회담 후 줄곧 핵 포기와 체제보장을 맞바꾸자는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해 왔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순차적 해결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서 왔던 양측이 이번에 다시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한 것만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잘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만큼 긴장의 파고는 높아지면서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비상한 자세와 준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결단과 대통령의 진지한 국회 협력 요청, 그리고 야당의 협력 등으로 인해서 파병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후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변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끝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입니다.

미국은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자국의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지상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대체하고 있고, 주둔기지를 훈련기지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변화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 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군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 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중대현안을 중심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NSC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국방위원회에 NSC가 출석하면 "NSC를 왜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느냐? 좀 실질화해서 그 규모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해라"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요즈음 말씀하시는 것을보면 "NSC가 왜 그렇게 일을 직접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NSC가 국가 최고 외교・안보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NSC 운영을 실질화할 필요는 오래 전부터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번에 새로 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 지는 초기라서 다소 오해는 있었지만 관계기관들 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확립되었다든지 또 관계기 관들이 협의하는 시스템이 상례화되었다든지 여 러 가지 시스템적인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장영달 의원 제가 보기로는 NSC가 제 기능을 회복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린 바처럼 2차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평화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구체적 순서와 방식을 놓고 회담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도 있었고 또 많은 협의를 거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6자회담 이후에 그동안 관계국 간에 공동발표문안을 협의한다든지 또 북한 측에 대한 핵동결 제의 등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이 1차 때보다는 보다 명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 한 기대를 위해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의를 비 롯해서 관계국 간에 긴밀한 대응책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달 의원 다음으로 6자회담에 있어서 제일 책임이 큰 것은 폐쇄적인 정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金正日 정권에 있겠습니다마는, 강한 입장 에 있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 하고 직접 협상에 나서야만 북핵문제가 풀릴 것 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폐 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가 이를 불신해서 6자회담이 부시의 입장에서도 적극성이 덜하다, 이러한 지적이 국제 전문가들 간에도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盧武鉉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상대로 6자회담을 앞두고 특단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盧武鉉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 회담 이후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북한 핵문제라든지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긴 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자회담을 전후해서 이러한 양국 정 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저 는 전망합니다.

○**장영달 의원** 6자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金大中·金正日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 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 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의 성사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과 여건이 아직은 조 성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추이를 보고 또 북한의 내부 사정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이 문제는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서 좀 중요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이 만약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욱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 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파키스탄과 유사한 방식으로 핵 보유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북핵 불용과 평화 해결의 원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북 핵문제가 극단적인 대결의 방향으로 치달을 때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복안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만일 2차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로 인해서 북한 핵문제가 추가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과정으로의 복귀 를 하도록 적극 권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북핵 불용과 평화 해결의 원칙이 반드시 양자택일적인 것은 아니고 병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평화에 기여가 있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추진해 왔던 金大中 전 대통령과 지 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 통령처럼 이제 정계를 은퇴해서 정치적인 사적 야욕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이러한 분들에게 남북평화정책을 위해서 좀 더 역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본 의원 이 지난해 1~2월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직 접 만났고 카터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람을 보내 서 접촉한 결과 그런 역할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 를 돕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金大中 대 통령께서도 그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나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 여서 이 세 원로의 활동을 정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저도 앞으로 적절한 시점 에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 다음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문겠습니다.

파병이 결정됐고 이제는 앞으로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국무총리께서, 조금 후에 국방부장관께서 중동 순방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총리께서도 적절한시기에 중동을 한번 순방하시는 것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할 것 같다고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필요한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3부처 장관들의 중동 순방을 끝낸 뒤에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장영달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 북장성급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13차 장관급회담 날짜가12일은 아니었습니다. 2월 3·4·5·6일이었습니다.

○**장영달 의원** 아, 그랬던가요? 그 자리에서 장성급 남북군사회담을 갖자, 그렇게 합의하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표현은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막적으로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대령급의 군사실무회담보다는 높고 약속이됐지만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2차 국방장관회 담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의 장성급회담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달 의원** 지금까지는 영관급들이 주로 실 무적인 회담을 했었는데……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한 20차 했습니다.

○장영달 의원 장성급으로 격상되게 되면, 지금 5~6월 되면 꽃게잡이 때문에 서해 NLL 부근에서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또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NLL 주변에 와서 어로작업을 함으로써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장성급회담에서 이러한 꽃게잡이 철의 충돌 그래서 NLL 부근에 공

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거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 업을 남북이 동시에 차단한다거나 이러한 협상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저는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로서 회담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데까지만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국방부장관이계시니까 그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공동어로작업이라든지 공동어업권 이런 등등의 문제는 군사당국자회담이라기보다는 해양수산 부문에서의 협력 문제가 되니까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일차적으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방지하기 위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기타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 문제까지도 점차나중에 범위를 넓혀서─해수부 대표들이 들어가면되지 않겠습니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일단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영달 의원 금년 봄부터는 꽃게잡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한두 척도 아니고 수백 척씩 온다 고 그래요. 이런 문제들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관께서 중심에 서셨 으면 좋겠습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은 장성급회담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영달 의원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잠시……

군사정권 때 있었던 일들인데 실미도 북파공작원들, 물론 이분들이 대북정책에서 우국충정에서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실체를 인정했고 또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보상법도 우리가만들어 줬는데 실미도 문제가 요즘 신문에 자주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는 현재 국방부에서도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너무 오래됐고 그동안에 비밀로 붙여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명되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의원** 너무 오랫동안 한 맺힌 부분들이 어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 니다.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달 의원** 둘째로 이라크 파병 지원율이 오늘까지 얼마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 ○國防部長官 曺永吉 어제까지 평균 한 15 대 1 입니다.
- ○**장영달 의원** 장교, 부사관 말고 사병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사병들도 현재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사병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 ○장영탈 의원 장관님이 늦둥이를 두셔 가지고 아드님이 최전방, 소위 말단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율이 많은 것은, 제가 월남전쟁에 1년간 복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질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아마 그런 가운데에서 이라크에도 국가를 대표해서 한번 가보겠다 하는 장병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이라도 겨울이니까 너무 춥고 또 사실 우리 병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사회처럼 활력 있게 오락을 즐긴다거나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분하고 또 지겹고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율이 높다거나 하는 경향은 없을까 모르겠어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원율이 높은 것은 저희들은 우리 젊은 이들의 진취적인 성향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병영생활 문제는 특히 국방부장관으로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안타까움과 자괴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늘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장병들은 먹고 입고 자는 기초적인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이 문제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약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집중 투자해서 앞으로 4~5년 내에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달 의원** 금년도에 막사 개선을 많이 하지 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막사 개선뿐만이 아니고 영내 생활하는 장병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영달 의원 미군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장병들도 병영 내에 있지만 휴식시간에는 개인이 좀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돼야 될 것 같아요.
- ○國防部長官 曺永吉 그렇습니다.
- ○장영달 의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하루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관께서도 노력하고 또 내년도 예산 투쟁에 있 어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國防部長官 曺永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 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달 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잠시 뵐까요?

이라크의 평화·재건 지원 업무를 위해서 우리 군대가 가지 않습니까?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 ○**장영달 의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한 이라크 대사관은 폐쇄 상태란 말이지요?
-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 ○장영달 의원 그런데 우리 병사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려면 외교 계통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평화 유지를 한다고 갔지만 거기에서 우리 부대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하고 또견제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때 거기에서 충돌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외교관들이 이라크 당국과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라 크 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라크 대사관은 폐쇄되고 없고, 지금 주이 라크 한국 대사관도 기능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 움들이 있어서 우리 장병들이 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라크 내에는 CPA라고 보통 얘기하는 연합군임시행정처가 있고, 그다음에 이라 크과도통치위원회, IGC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CPA가 상당한 권한을 더 향유하면서 최종결정 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CPA하고 IGC가 협조해가면서 여러 가지 민정으로 넘긴다든지 이라크

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라크 내의 과도국회라든지 과도정부 수립, 민정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CPA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있고, 앞으로 이라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나 경제부처 관리도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CPA나 IGC 위원들하고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키르쿠크 지역의 주지사라든지 또 시의회 의장,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도 평소에 긴밀히 접촉해서 이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라크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라크 내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지사나 시의회 의원들,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방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 이들에게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이라크 파병에 따르는 입장을 설명을 하고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장영달 의원** 지금 키르쿠크에 우리 군이 가더라도 쿠웨이트에서 보급이 가는 거지요?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의원 거기 보급노선이 대단히 길어요. 지금 서희·제마가 가 있는 낫시리아보다 배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중간 부분이라거나 또 바그다드의 환경 조성이라 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달 의원 그런데 여기 대사관은 없고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서대민 활동들, 이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부대가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대단히 커서 그점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潘基文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국방부장관하고 제가 허바드 주한대사, 또 라포트 사령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라크 파병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군수교통 통신 수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히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미국 측으로부터도그러한 협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영달 의원 예.

우리는 지금 총력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의 동맹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협력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활용할 때만이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특히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아홉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 포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8시06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한 분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 니다.

○**서상섭 의원** 인천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임기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 16대 국회에서는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도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온 4개 법안 중 2개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인희생명예회복특별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16대 국회 말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17대 국회로 이관되는, 폐기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또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도 않은 이유로 해서 이 국회에서 통째로 삭감되 어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그 후원성금을 모아 이 제 7억을 넘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 겠다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뿐입니다. 아마 아 직도 친일이 애국이었던 시절의 중추원이 대한민 국 국회라는 허울로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금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제 나라 순국선열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세계 가 보라는 듯이 강행하더니 우리나라 독도 우표 발행을 핑계 삼아 내친 김에 이제는 독도까지 저 희 땅이라고 보라는 듯이 외쳐 대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애국시민들의 울분을 달랠 길 없고, 오늘처럼 국회의원인 것이 오직 부끄러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비참한 심정 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盧武鉉 정부의 저자세·무소신 독도정책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 드리고, 이 정부가 과연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 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 하고자 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 자 체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궤변, 바로 그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어차피 내 아내인데 나서서 내 아내라고 떠들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일본만 더 자극한다" 예전과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답변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다.

"일본국 총리 고이즈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독도는 분명 한국 땅이다. 당신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계속 우겨 대면 양국 간우호선린 관계가 근본적으로 모두 깨질 수밖에 없다"바로 이런 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盧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엔 무대응이 상책입니까? 일본은 때마다 총리까지 나서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법석인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마다 그냥 웃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정부가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며 혼자서 되뇌이고 뒷짐지고 비켜 서 있을때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서서히 그 강도를 증폭시켜 가고만 있어 왔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실질적 지배론만을 혼자 읊조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않을 때 국제사회는 독도가 국제적인 무인도 분쟁 지역인 줄만 알아 가고 있습니다. 정작 외국인의 60~70%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 동안에 독도는 국제적인 외교가에서조차 국제적인 미아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오래 전부터 무서운 음모를 꾸며 왔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켜 놓고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을 고립시켜 보다 유리한 국제적 입장에 서기 위해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잊어 버릴 만하면 계속 독도 문제를 제기해 두려는 음 모에 총리와 국민이 한결같이 철저하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한가하게 '어 차피 내 마누란데'하는 내 마누라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 묻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바보라고 하는데 나만 혼자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줍니까? 바보가 아님을 증명해야지요. 우리가 혼잣말만 해 대는 진짜 바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빼앗으려 하는데 그 땅이 당연히 내 땅이니까 쓸데없이 대꾸하면 손해만 본다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쳐서 그땅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게 잘 잊어버려주는 망각의 나라, 천사의 나라입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독도 정책으로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국제사회는 계속 일본 편으로 기울어 갈 것이라고는 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盧 대통령, 더 이상 이 독도는 내 마누라가 아 닙니다.

보십시오! 가고 싶어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 정부를 자극할까 봐 걱정되어서 자연철새보호지역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내세워 온 국민들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이게 어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짓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외교적인 분쟁거리가 된다며 제 나라 영토에 의용경찰대, 의경을 시켜지키는 척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가고 싶은 모든 국민이 마음대로 독도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내세웠던 자주외교, 당당한 외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정부가 진정 대한 민국 정부라면 잘못된 독도정책의 큰 물줄기를 이제는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무소 신·무국적·저자세 독도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도록 이제는 우리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 다. 독도에 관한 한 가만히 있는 게 으뜸이라는 이 해괴한 정부의 독도정책을 이제는 국회가 국 민의 힘으로 바꿔 내야 합니다.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도 억울한데 1999년 1월 金大中 정부마저 경제수역, 소위 EEZ를 정하면서 독점수역의 경계를 독도 기점에서 울릉도 기점으로 바꾸고 독도를 한일 양국의 공동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도 있습니다마는, 독도는 다시 이렇게 국제적인 미아신세로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인 권한을 포기하는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과 어 업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명 또다시 일본은 독도를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때도 이 정부는 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모른 척할 것입니까? 계 속 공동수역 내 이중국적의 독도처럼 방기할 셈 입니까?

일본의 독도 관련 시비는 보통 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할 때는 쉬고 있는 것이지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총리가 들어서도대를 이어가며 계속 외쳐 댈 것입니다. 따라서일본과의 숙명적인 외교전쟁, 이 독도싸움은 정작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싸움이라면 이 제부터라도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밝 혀야 합니다.

盧武鉉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나라 이라크에 국군 파병을 하기에 앞서 우리 영토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연결시켜 하나의 섬으로 만드는 공사도 적극 서둘러야 합니다. 독도 문제 는 무대응이 상책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가 나서 서 국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시비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 의 무소신, 저자세, 무국적 독도정책이 오늘과 같 은 사태를 자초했음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률을 더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出席議員(183人)

강 성 구 강 숙 자 姜雲太 姜仁燮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具 鍾 泰 權琪述 권 영 세 權哲賢 金景梓 김 근 태 金光元 金杞培 김 기 재 김 덕 규 金德龍 김 덕 배 金東旭 김 명 섭 金芳林 金 秉 浩 김 부 겸 김 상 현 金型順 김 성 조 김 성 호 金映宣 김 영 춘 김 영 환 金容鈞 金 龍 學 金龍煥 김 원 기 金元吉 金政夫 김 정 숙 金鍾巡 金鍾河 金宗鎬 金鎭載 金燦于 金忠兆 남 경 필 김 태 홍 김 희 선 나 오 연 都 鍾 伊 孟亨奎 목 요 상 민 봉 기 朴槿惠 박 상 규 朴寬用 朴 錦 子 朴相熙 박 시 균 朴相千 朴 承 國 朴仁相 朴 源 弘 朴 鍾 根 朴 鍾 浣 박 종 희 박 박 창 달 朴宗雨 진 박 혁 규 서 병 수 朴憲基 배기선 서 상 섭 손 희 정 송 석 찬 宋 丙 大 신 계 륜 송 훈 석 신 기 남 申榮國 심 규 철 신 현 태 申榮均 沈載權 심 재 철 안 경 률 安東善 安商守 안 영 근 梁承富 梁正圭 嚴虎聲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시 민 劉容泰 유 재 건 柳在珪 柳漢烈 柳興洙 尹 汝 雋 尹榮卓 尹漢道 李康斗 이 강 래 李敬在 李根鎭 이 낙 연 李萬燮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李祥羲 李相培 이성헌 이 승 철 李良熙 李嬿淑 이 우 재 이 원 형 李 允 洙 李在五

이 종 걸 李漢久 李在昌 李正一 이 해 봉 李 이호웅 이 해 찬 協 이희규 임 종 석 林鎭出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장 영 달 張在植 전 용 학 張泰玩 全甲吉 田瑢源 전 재 희 정 몽 준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범 구 정 문 화 정 의 화 정 세 균 정 장 선 정 창 화 鄭哲基 鄭亨根 趙富英 조성준 趙舜衡 曺 雄 奎 조 정 무 趙在煥 趙漢天 曺 喜 旭 처용 택 천 정 배 崔明憲 崔炳國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최용규 최 재 승 秋 美 愛 韓昇洙 韓忠洙 韓和甲 咸 錫 宰 咸 承 熙 玄敬大 홍 문 종 洪思德 洪 準 杓

○出張議員(1人)

이 창 복

○請暇議員(43人)

강 봉 균 강신성일 權五乙 權泰望 金敬天 金淇春 김 락 기 金武星 金容甲 김 일 윤 金台植 김 택 기 金鶴松 김 형 오 김홍일 金晃植 金孝錫 남 궁 석 문 석 호 박 병 석 朴世煥 朴 鍾 雄 朴熺太 白承弘 송 광 호 송 영 길 안 택 수 薛 勳 윤 경 식 윤 두 환 이 규 택 李 方 鎬 李龍三 李仁基 이 원 성 李允盛 林仁培 鄭字澤 李在善 李柱榮 河 舜 鳳 玄勝一 許 泰 烈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建 高 일 부 장 통 관 丁 世 鉉 외교통상부장관 潘 基 文 국 방 부 장 관 曺 吉 永 행정자치부장관 寬 許 成

○出席政府委員

행정자치부차관 金 住 炫

【報告事項】

○議案提出

國會法中改正法律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월16일 원희룡·이상득·박혁규·전재희· 오경훈·윤경식·이병석·서병수·임태희· 오세훈·이성헌·권영세·정병국·정의화· 권오을 의원 발의)

國會事務處法中改正法律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월16일 원희룡·이상득·박혁규·전재희· 오경훈·윤경식·이병석·서병수·임태희· 오세훈·이성헌·권영세·정병국·정의화· 권오을 의원 발의)

國會圖書館法中改正法律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월16일 원희룡·이상득·박혁규·전재희· 오경훈·윤경식·이병석·서병수·임태희· 오세훈·이성헌·권영세·정병국·정의화· 권오을 의원 발의)

이상 3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計劃書提出

2004년도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서

(2월16일 정부 제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송부하겠음